

제6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데이터로 본 한국사회, 현안과 비전

2026. 5. 27.(수)
통계센터 국제회의실

제6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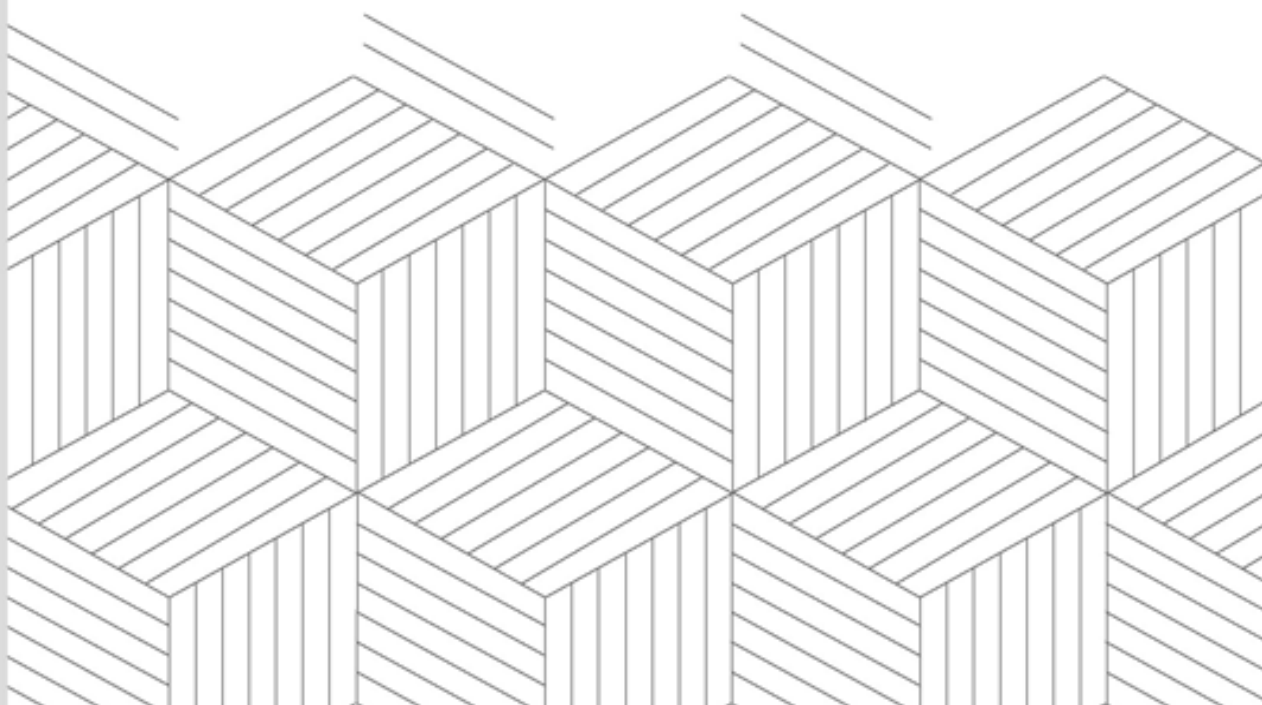
데이터로 본 한국사회, 현안과 비전

2026. 5. 27.(수)
통계센터 국제회의실

* 본 발표자료집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발표자의 견해이며,
국가데이터처 혹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기조연설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제6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2026.5.27

한국 사회, 어디로?

이 정 우
경북대 명예교수, 경제학

목차

1. 사람은 때를 잘 봐서 태어나야
2. 한국 사회의 최대 고민
3. 문제의 해법
4. 구세대가 신세대에 바란다

사람 팔자

- Richard A. Easterlin('이스털린의 역설')

Birth and Fortune, 1980

어느 세대에 출생하느냐(동시대 출생자 숫자)가 그 사람의 평생 운수를 좌우한다.

- 입시경쟁 치열, 학벌사회의 온갖 차별
- 취업난, 비정규직 차별
- 결혼 기피(만혼), 주택난,
- 전반적 경쟁과잉사회에서 스트레스 가득 찬 인생...지금 청년은 불운?
3포세대, 5포 세대

2

한국 사회의 주요 고통

1. 교육난: 친구들과의 과잉경쟁, 무한의 수업,
과외: 1류대, 2류대, 지방대... 서열주의
2. 취업난: 청년 실업률 10%, 과거 좋았던 시절
취업해도 비정규직 문제 기다려.
3. 주택난: 세계 최고의 땅값과 PIR
4. 결혼난: 미국 underclass 논쟁 William J.
Wilson의 'marriageable male' 가설이 모두 기성세대의 책임.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청년들의 '눈높이 조절' 운운은 어불성설

3

경쟁이냐, 협력이냐?

- Jack Welch, General Electric 회장
- 주주가치 중심 경영, 구조조정, 감원, 해고 주도하여 한때 대성공, '경영의 귀재'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반성, 사과
- 별명, '중성자탄 잭' neutron bomb Jack
- 감원, 지나친 경쟁은 회사를 망치는 첩경
- 경쟁과 협력: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학교
- 경쟁보다 협력: 流水不爭先
- 100년전 허버트 스펜서 : 표토르 크로포트킨

4

경쟁지상주의의 함정

- 미국 대학의 성과연봉제 비판
- (미시간 공대 조벽 교수), 한국 대학은?
- 페퍼 교수(스탠포드 경영학자) 성과연봉제 비판, 집단보상제도로 가야 한다.
- 올리버 하트 & 뱅트 홀름스트림 교수, 2016 노벨경제학상 수상, 불완전계약 이론
불완전 정보하 성과연봉제는 기회주의적 행동조장, 부작용 크다.

5

교육난의 해법

- 한국 교육의 몇 가지 신화
- 한국 교육을 선망했던 오바마 대통령
입시지옥, 'SKY 캐슬' 현상, 특목고, 자사고 문제
- 입시제도 수십번 고쳐도 문제는 악화일로
->속설 "입시제도 고쳐도 소용 없다" 패배주의
- 그러나 결국 입시제도 개혁으로 문제 풀어야.
입시 단순화, 수시와 정시, 입시 기본을 and에서 or로,
교사별 평가 도입, 통합국립대 설치

6

취업난의 해법

1. 일자리 부족, 청년 실업
 - 분배->성장->고용(자본주의 황금기의 교훈)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이나 不及, 過猶不及
2. 일자리 차별: 비정규직
 - 한국은 최대, 최악의 비정규직 왕국
 - 공공: 연대임금, 사회연대기금, 공공기관 평가 연결+ 예산 차등
 - 민간: 정부계약시 반영(affirmative action)

7

주택난의 해법

- 한국의 땅값은 세계 최고, 주택난은 그 결과, 세계 최고의 PIR(price income ratio)
- 수십년 저축해도 집 마련 어려움.
- 주택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 속설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한다”?
- No!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 아니라도 필요조건.
- 양도소득세 개혁, 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8

청년들에게 바란다

Easterlin, “태어날 때 동료가 너무 많으면 고생”

그러나 한국, “태어날 때 조상을 잘못 만나면 고생”

1. 정의감을 잃지 마라
2. 남을 밟고 올라서지 마라
3. 멀리 보고 천천히 우직하게 걸어가라

牛步千里 虎視牛行

4. 기본으로 돌아가라: 폰보다 책을 가까이.

세종, 정조, 정약용, 이가환, Theodore Roosevelt(桂-Taft 협약 1905),

松下幸之助, 土光敏夫

5.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 낙관을 잃지 마라

9

Eton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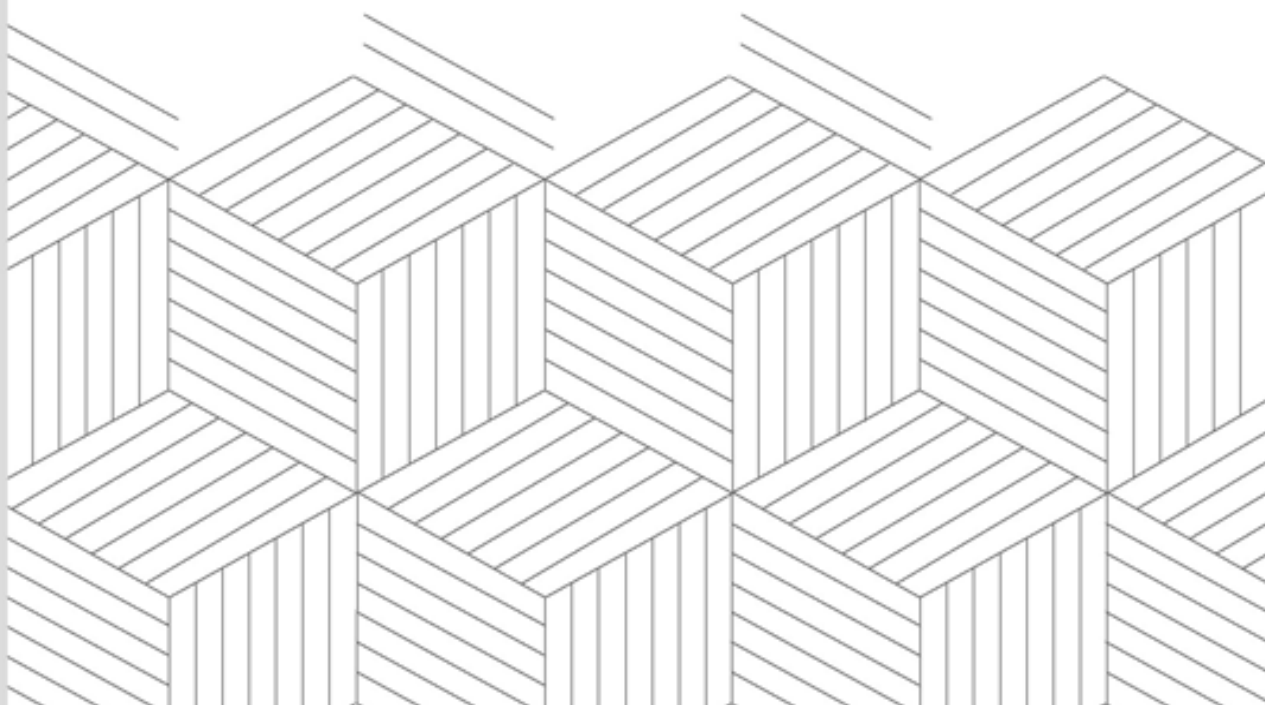
10

경청 감사

이 정 우
joulee@knu.ac.kr

세션 1 - 발표 1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26.5.27.

김 성 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글은 [2025년 한국의 사회동향]의 “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내용을 토대로 보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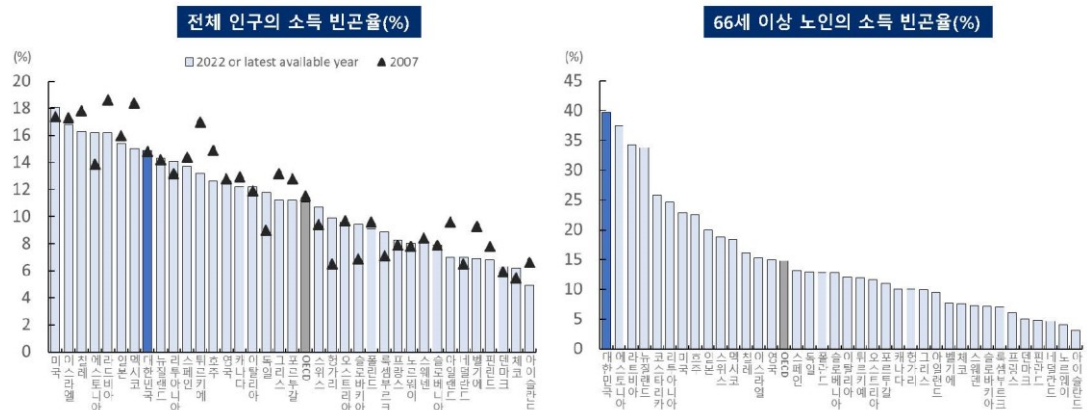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1. 국제비교로 보는 소득과 자산 빈곤의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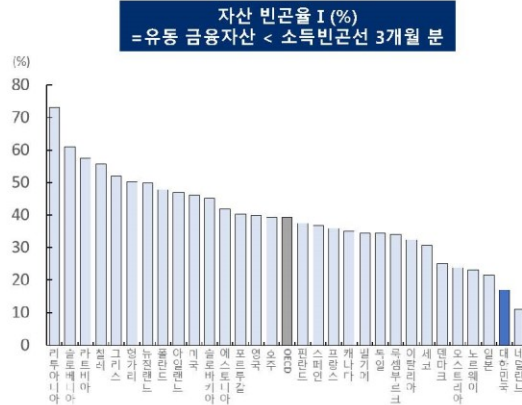


한국의 소득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하는 한편,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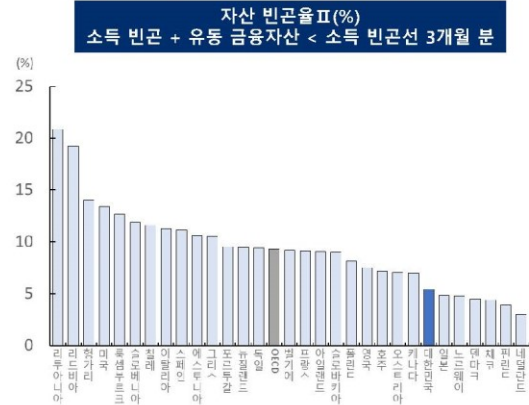


1. 국제비교로 보는 소득과 자산 빈곤의 불균형

▶ 유동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 빈곤율**은 소득 빈곤과 결합해도 OECD 가입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



주 1) 자산 빈곤율 I은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 월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세 배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주 1) 자산 빈곤율 II은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월소득 50%에 미치지 않고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세 배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2.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 추이

▶ 전체 인구 빈곤율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

▶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지출을 통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완화하지만, 불충분한 상태



주 1)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감한 것임.
2)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감한 것임.
3) 가구원수의 두 배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4)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가년 단위 분석 결과임.
5)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년 가중치를 적용함.
6)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미여조데이터), 각 연도.

2.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 추이

특히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에 비해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압도적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의 후기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

65~74세 가구주 가구 빈곤율(%)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 빈곤율(%)



주 1)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연금소득의 합에서 사적연금지출을 감한 것임.
 2) 저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연금소득을 더하고 공적연금지출을 감한 것임.
 3)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저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4)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개인 단위 분석 결과임.
 5)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6)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3. 한국의 노인 자산 구성과 빈곤 추이

실물자산 중심의 가구 자산 구성 →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중심 자산 구성 행태 강화

·실물자산, 특히 거주주택 자산은 주거의 질 + 주거 안정성

전체 가구 자산 구성(%)

실물자산 = 거주주택자산
 + 거주주택 외 부동산
 + 계약금 및 중도금
 + 토지,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

금융자산 = 저축액
 (저축, 펀드, 보험 등)
 + 전월세보증금



노인 가구 자산 구성(%)



주 1)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저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 단위 분석임.
 3)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4) 조사시점 전년도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3. 한국의 노인 자산 구성과 빈곤 추이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와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 모두 실물자산 중심의 자산 구성

2020년대 전후부터 후기 노인의 실물자산 비율이 전기노인 대비 높은 경향



주 1) 가구원수의 두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 단위 분석임.
3)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4) 조사시점 전년도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3. 한국의 노인 자산 구성과 빈곤 추이

자산 빈곤율도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이 높은 편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에 비해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의 자산 빈곤율이 더 심각

자산 빈곤 = 균등화 순자산
≤ 소득빈곤선 x 3개월



주 1) 가구원수의 두트값으로 균등화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소득빈곤선의 3개월분 이하이면 자산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 가중치와 가구원수를 곱한 가산 가중치를 적용함.
3) 조사시점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4. 노인 소득과 자산 결합 빈곤

소득과 자산 결합 빈곤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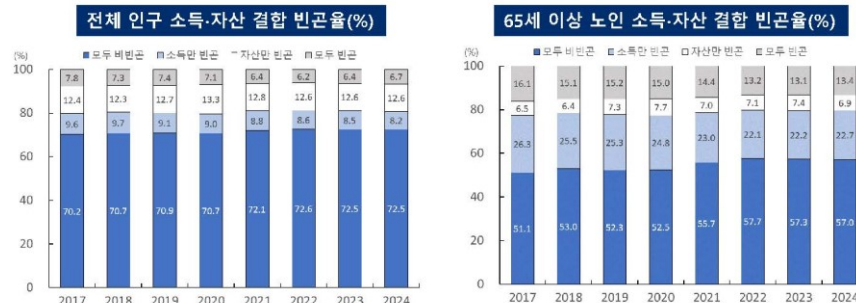
자산	소득만 빈곤	소득·자산 모두 비빈곤
	소득·자산 모두 빈곤	자산만 빈곤
자산 빈곤선		
	소득 빈곤선	소득

주 1) 소득 빈곤선은 가구원수의 투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 중위소득의 50%이고, 자산 빈곤선은 소득 빈곤선의 3개월분임.
2) 김영아 외(2021, p.81), (김영아 외, 2023), 이영숙 외(2023, p.8)의 그림을 참고함.
출처: 발표자 작성

4. 노인 소득과 자산 결합 빈곤

● **결합 빈곤** 관점에서 노인은 소득·자산 모두 비빈곤 > 소득만 빈곤 > 소득·자산 모두 빈곤 > 자산만 빈곤

·전체 인구 집단의 분포는 노인과 경향이 동일하지만, 소득·자산 모두 비빈곤 집단이 70% 이상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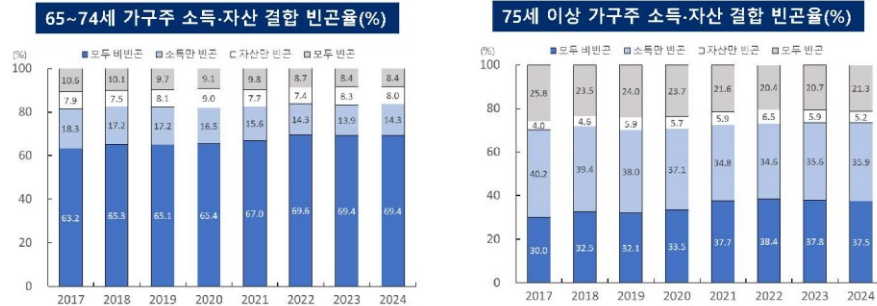


주 1) 가구원수의 투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원수의 투트값으로 균등화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소득빈곤선의 3개월분 이하이면 자산 빈곤으로 정의함.
3)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4) 조사시점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4. 노인 소득과 자산 결합 빈곤

결합 빈곤 관점에서도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에 비해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가 더 취약

모두 빈곤 vs. 소득만 빈곤 vs. 자산만 빈곤 집단에 차별화된 코호트별 전략 필요



주 1)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소득빈곤선의 3개월분 이하이면 자산 빈곤으로 정의함.
3) 가구 가중치의 가구원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4) 조사시점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미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5.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적 진보 수준 대비 여전히 높은 노인 소득 빈곤율

특히,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의 후기 노인이 더욱 취약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개별 대응하는 사적 복지체제가 발전

현세대 노인의 경제적 삶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과 자산 기능을 입체적으로 고려할 필요

상대적으로 OECD 가입국 대비 자산 빈곤율이 낮지만, 노인 집단에서 자산 빈곤은 다차원적 삶의 질 저해 우려

노인의 주거 빈곤 → 주거 안정성이나 주거의 질 등을 담보하기 어려울 가능성 + 추가 소득으로 보완하기 어려울 가능성

소득·자산 결합 빈곤 → 모두 빈곤한 취약 집단, 자산만 빈곤한 집단, 소득만 빈곤한 집단 등 이질성 존재

5.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첫째, 공적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노인, 특히 **후기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불충분** → **적극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기초) - 기초연금 - 공적연금의 유기적 연계 설계로 노후 빈곤 적극 대응 필요

• 획일적 설계보다 공적연금의 연차별 성숙도 및

노인 연령집단별 빈곤 위험을 고려하여

최소 기본 생활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코호트별 전략 차별화

(e.g., 후기 노인은 기초연금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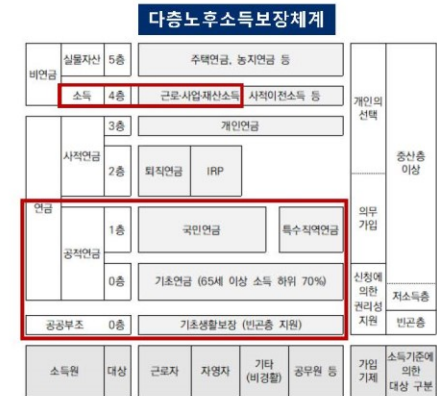
+ 전기 노인은 공적연금 역할 점진적 확대)

• 단, 재정지출에 의한 국기초+기초연금과

기여금에 의한 공적연금 간 재원 부담의 형평성 고려 필요

• 활력이 있는 전기 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참여 및 노후소득 다양화



출처: 김경아 외,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0의 그림의 일부

5.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둘째, 소득·자산 모두 빈곤 vs. 소득만 빈곤 vs. 자산만 빈곤 집단의 **이질적 욕구** → **차별적 전략 필요**

• (1) **소득만 빈곤** → 국기초+기초연금+공적연금의 유기적 조합으로 적극적 노후소득보장

• (2) **자산만 빈곤** → 실물자산,

특히 거주주택자산의 주거안정성 + 주거의 질을 보장하면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유동화 정책(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활성화

- 26.6.1. 기준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 등 제도 개선 중

- 60세 이상 고령자 중 주택소유자 670만 명 대비(국기데이터처, 2024년 주택소유통계)

주택연금 가입자는 '26.3. 기준 15만 명에 불과

- 노후 자산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절대적인 가입률 제고 노력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할 필요

• (3) **소득·자산 모두 빈곤** → 적극적 노후소득보장 + 유동화 정책 동시 개입



출처: 김경아 외,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0의 그림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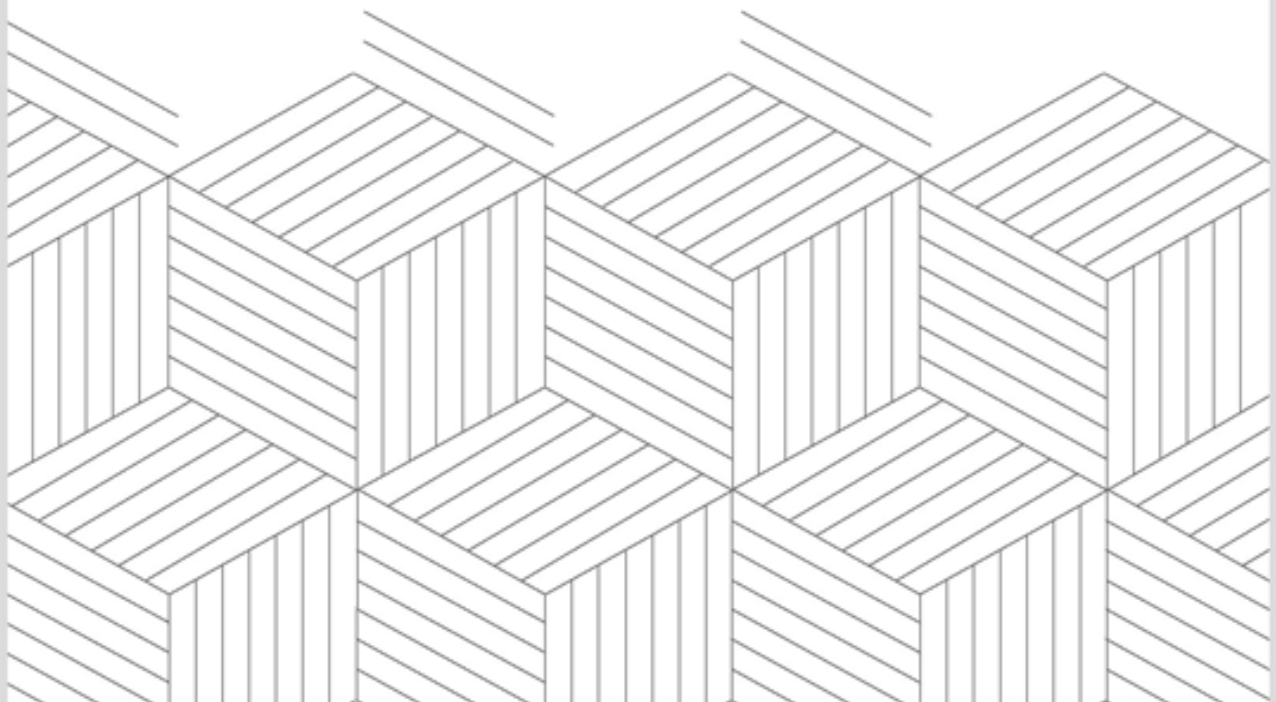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세션 1 - 발표 2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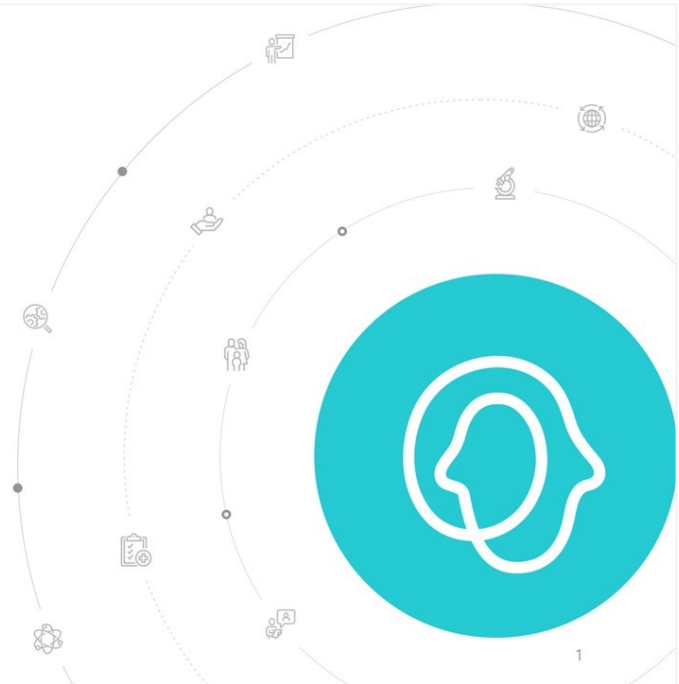
【사회동향 포럼】

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

2026.5.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들어가며 : 후기 노인 인구의 규모 및 특성

PAR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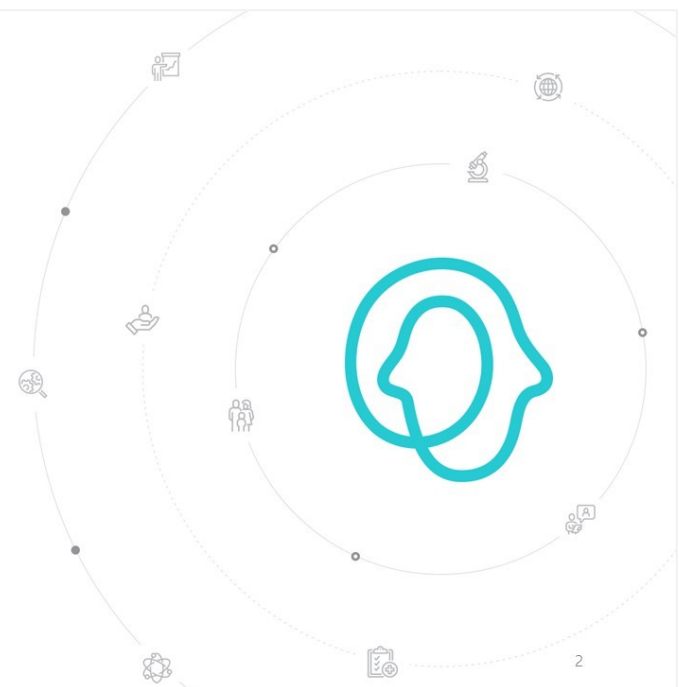
후기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

PART.3

후기 노인의 의료 및 돌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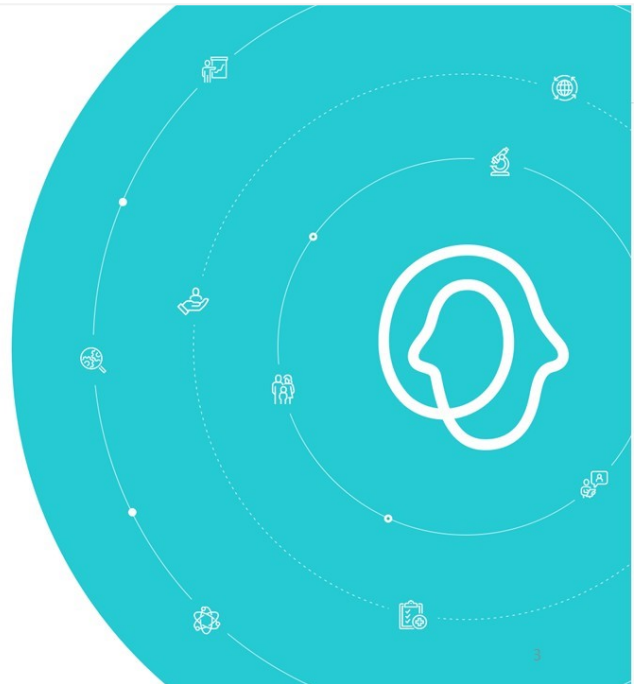
PART.4

나아가며



PAR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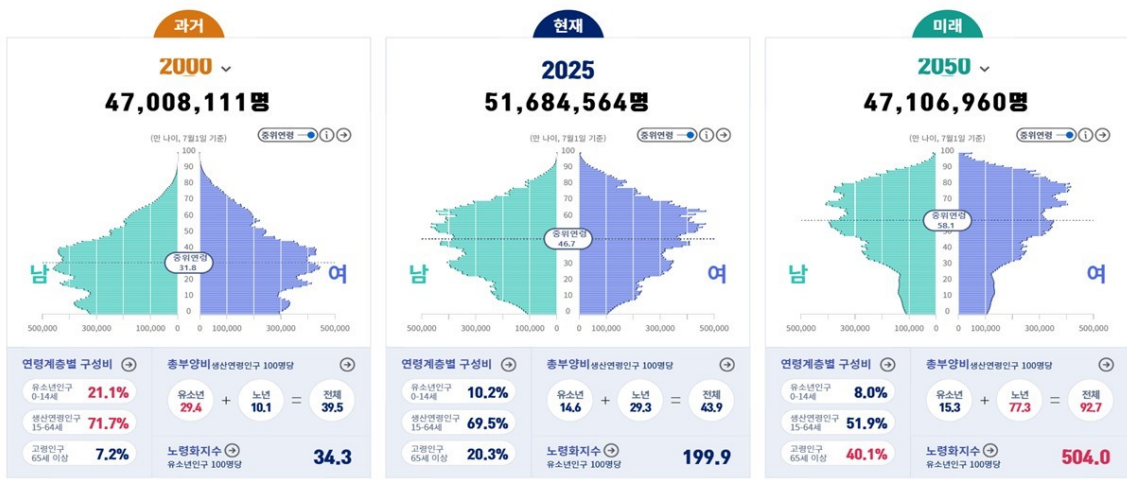
들어가며 : 후기 노인 인구의 규모 및 특성



PART.1

1. 인구구조 변화 : 2000~2050년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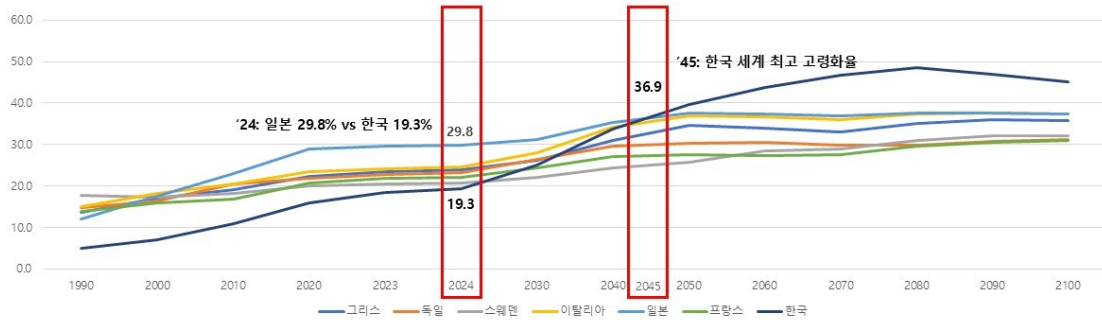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KOSIS

2. 인구 고령화 국제동향

✓ 인구 고령화는 전 지구적 현상, 한국은 가장 빠르고 높은 수준의 고령화를 예상

- 고령화율 높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10년 가량 고령화율 20% 전후에 도달 후 서서히 진행중
- 한국 '25년 고령화율 20%도달, 2045년 세계 최고 (일본 고령화율: '24. 29.8%, '40년 이후 감소)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준비 필요 시점

< 주요국의 고령화율 변화 및 전망(1990~210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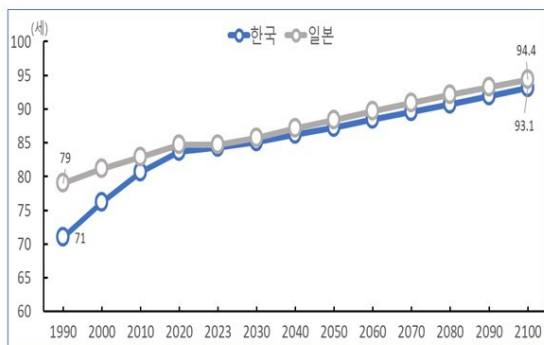
5

3. 기대수명 증가와 노년기 세분화의 필요성

✓ 기대수명 증가 : 2000년 76.2세 → 2023년 84.3세 → 2100년 94.4세

-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년기의 기간을 연장,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 높아짐

< 기대수명(1990~2100년) >



출처: UN, 기대수명, 각 연도

< 노년기 구분 기준 >

-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군별 특성이 매우 상이, 특히 노화에 따른 건강과 돌봄 특성과 욕구 차이
→ 세분화된 노년기 분류 필요성 제기
- 노년기 구분 기준
 - 2단계 : **전기(65-74세) - 후기(75세~)**
 - 3단계 : 초기(65-74)-중기(75-84)-후기(85세~)
-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75세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 노인으로 분류 활용
 - 노인 통계에서 연령별 세분화된 자료 부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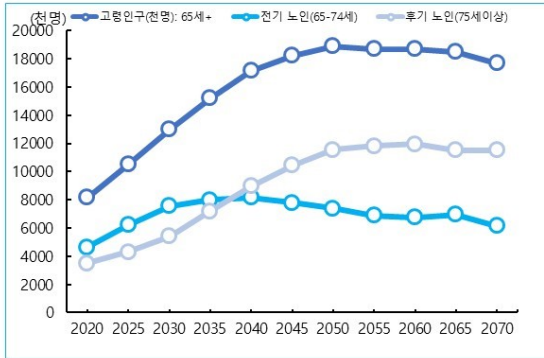
6

4. 후기 노인 규모 및 가구 특성

✓ 후기노인의 급속한 증가

- '25년 429.8만명(총인구의 8.3%, 65세 중 40.9%)
- '50년 노인인구 감소, '70년 후기 노인 지속적 확대

< 연령군별 노인 규모(2020~207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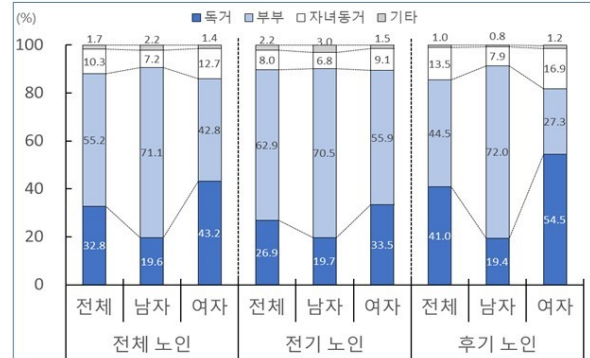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 후기노인 : 독거 비율의 증가

- 노인 중 독거비율 : 32.8%(남 19.6%, 여 43.7%)
- 후기노인 독거비율 : 41.0% (vs 전기 26.9%)

< 전·후기 노인의 성별 가구형태, 2023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23

7

5. 후기 노인 건강과 돌봄의 통계적 모니터링 필요성

✓ 노년기 단계별 건강과 돌봄의 특성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 후기 노년기 : 신체 및 정신적 기능 저하가 본격화
→ 건강관리와 돌봄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관심 증가
- 초고령 사회 대응의 주요 이슈로서 "후기 노인"에 대한 건강과 돌봄이 부각
- 후기 노인의 건강 노화(healthy aging)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의료와 돌봄 비용 감소 효과 기대

* 일본 : 2025년 단카이세대(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 진입,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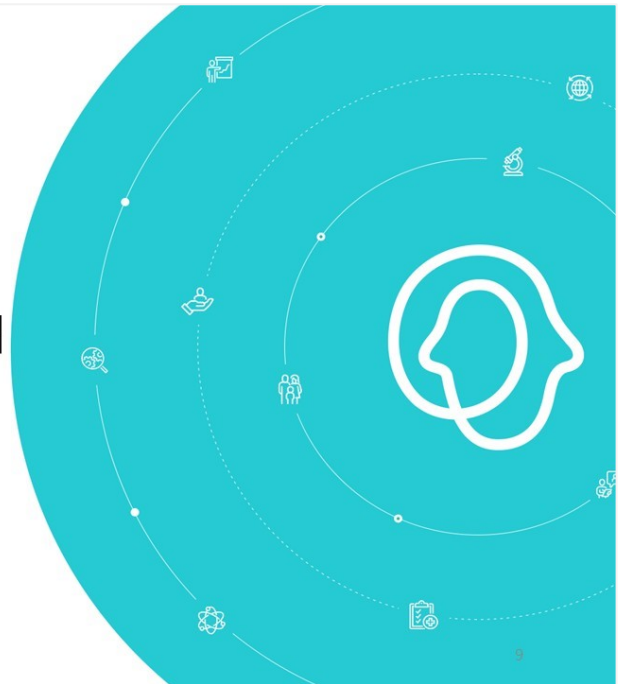
** 한국 : 2030년 부터 베이비부머 75세 진입 시작

✓ 초고령사회 대응의 첫 단계 :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세분화된 노년기 특성의 지속적 모니터링

-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정확하 현황 파악과 대응 필요

PART.2

후기 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



PART.2

6. 후기 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현황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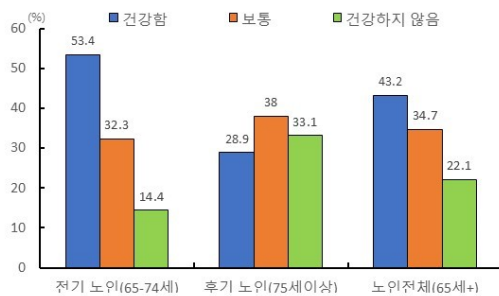
✓ 후기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 후기 노인 중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 : 33.1%

✓ 복합만성질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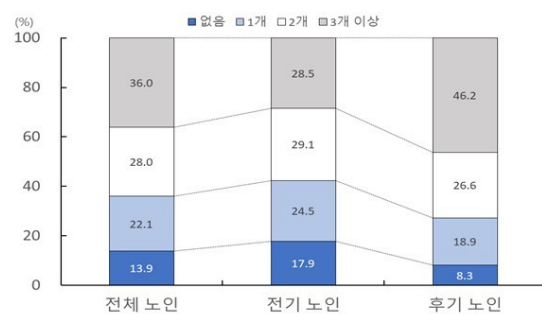
- 3개 이상 만성질환자 : 후기 노인의 46.2%
- 고혈압(69.0%)>당뇨>고지혈증>골관절염

< 전·후기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2023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23

< 전·후기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 2023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23

10

7. 후기 노인의 치매 추정 유병률

❑ 후기 노인의 높은 치매유병률

- 후기 치매유병률은 15.7% vs 전기 노인 4.6%에 약 4배 높음
- 경도 치매는 10.6%이며, 중등도, 증증 비중은 4.6%와 0.4%

<전·후기 노인 치매 추정 유병률, 2025>

(단위:명, %)

	치매 환자수	치매 유병률			
		유병률 (소계)	경도	중등도	증증
전체	970,759	9.2	6.2	2.7	0.3
전기 노인	284,213	4.6	3.1	1.3	0.1
후기 노인	686,545	15.7	10.6	4.6	0.4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 오늘(추정 치매환자 통계), 20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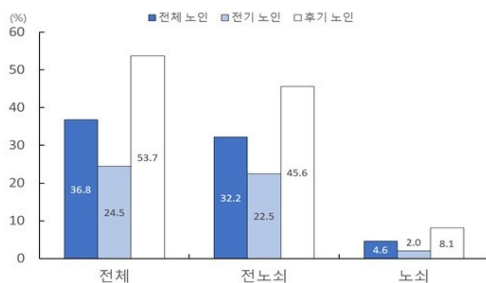
11

8. 후기 노인 노쇠 및 일상생활기능제한

❑ 노쇠 상태

- 후기 노인 중 전노쇠는 45.6%, 노쇠는 8.1% (53.7%)
- 전기 노인에 비해 전노쇠와 노쇠 비율이 2배 이상 높음

<전·후기 노인의 노쇠 상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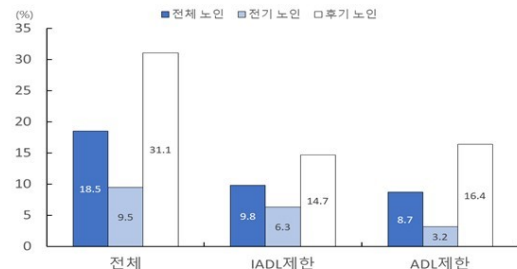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23
 주: 노쇠(전노쇠, K-FRAIL, 적도로는 총 3분항으로 0점은 건강(비노쇠, robust), 1~2점(전노쇠, prefrail), 3~5점은 노쇠(frail)로 구분됨. ① 1개월간 피로 경험, ② 도울일이 10제단 오르는 능력, ③ 도울일이 없이 300미터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여부, ④ 구별됨, 양노, 양, 만성 폐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혈당증, 전신 관절염, 뇌경색, 신장질환 진단(1개 이상), ⑤ 제동감소의 발목

❑ 일상생활기능제한을

- 후기 노인 중 31.1%는 일상생활에 기능 제한
- 특히, 식사하기 등 기본적 일상생활(ADL) 제한 16.4%

<전·후기 노인의 일상생활기능제한을, 2023>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23
 주: 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용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정거먹기,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 등 지를거스름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중 1개 이상 제한
 3)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옷 입기, 세수양치질, 머리감기, 욕욕 또는 샤워하기, 자러 놓은 음식 먹기, 누웠 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중 1개 이상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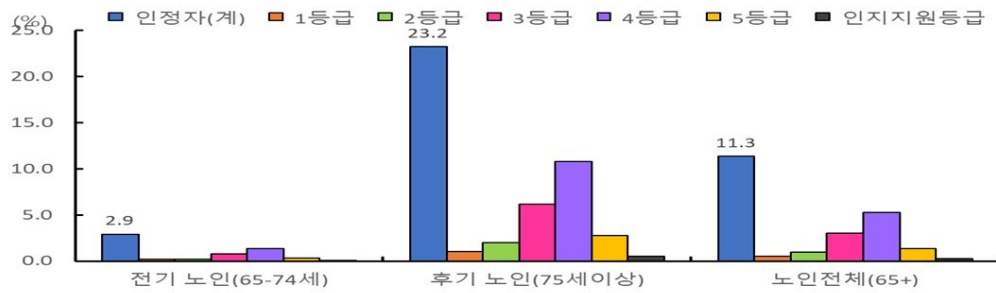
12

9. 장기요양 인정 현황

❏ 후기 노인의 높은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

- 후기 노인 중 23.2%가 장기요양인정자(전기 노인 2.9%), 이중 요양필요도가 높은 1~2등급(3.0%), 3~4등급 17.0%
- 후기 노인의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가 본격화되고, 이로 인한 요양필요도가 매우 높음

< 전·후기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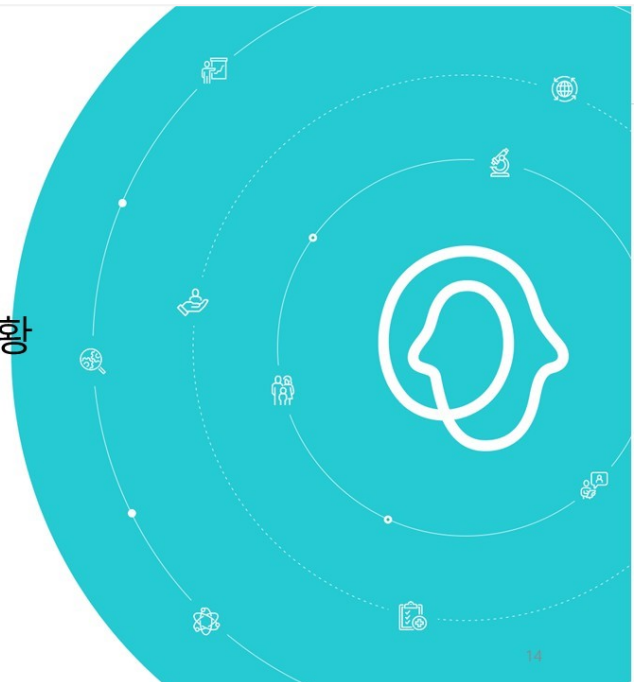


주: 1)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춘 자로 요양필요도에 따라 1등급(요양필요도 높음)~5등급(요양필요도 낮음), 인지지원등급(요양필요도는 5등급보다 낮으나 치매 등의 인지기능 저하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전체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수, 전기 노인은 65세 이상 74세 미만,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24. 국가데이터저, 「인구통계조사」, 2024.

13

PART.3

후기 노인의 의료 및 돌봄현황



14

10. 후기 노인 의료이용 현황

✓ 의료이용 현황

- 후기 노인 1인당 년평균 내원일수: 51.1일
- 년평균 요양급여일수: 621.4일
- 평균진료비: 6,473.9천원

< 전·후기 노인의 의료이용, 2023 >

(단위: 일, 천원)

	1인당년평균 입내원일수	1인당 년평균 요양급여일 수	1인당년평균 진료비
전체	42.6	553.7	5,245.5
전기 노인	36.4	504.9	4,358.7
후기 노인	51.1	621.4	6,473.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령 별 진료현황(통계), 「건강보험통계」, 2023

✓ 의료욕구 미충족 비율 및 이유

- 병의원/치과진료 미충족률: 전기노인에 비해 높음
- 이용못한 이유
 - (병의원)거동불편이나 동행인 없음(36.0%), 교통 불편(13.0%), 경제적 이유(26.0%)
 - (치과)경제적 이유(68.2%), 거동불편(11.8%), 치료두려움(12.4%)

< 전·후기 노인의 의료욕구 미충족률, 2023 >

(단위: %)

	병의원	치과진료
전체	1.8	3.4
전기 노인	1.3	2.8
후기 노인	2.4	4.1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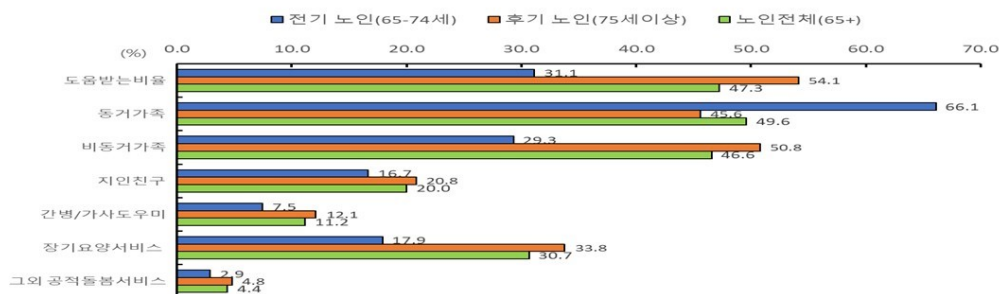
15

11. 후기 노인 돌봄 현황

✓ 돌봄 수급 여부 및 제공자

- 일상생활 기능제한 노인 중 돌봄을 받는 비율은 47.3%(후기노인 54.1%, 전기 노인 31.1%)
- 후기노인 돌봄제공자 : 비동거 가족 50.8%, 동거가족 45.6%, 장기요양 33.8%, 지인/친구 20.8%, 간병/가사도우미 12.1% → 전기 노인에 비해 높은 공적돌봄 수급 & 가족 등 비공식 돌봄 또한 높음

< 전·후기 노인의 돌봄현황, 2023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23
주: 돌봄제공자별 수급률 은 중복 응답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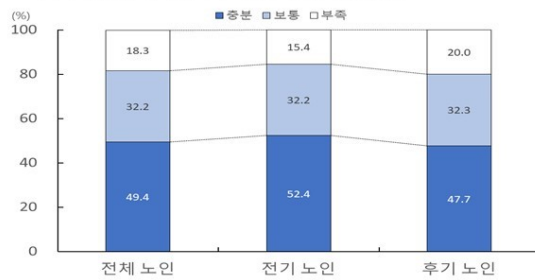
16

12. 후기 노인 돌봄충분성 및 장기요양 이용률

✓ **돌봄충분성**

- 후기 노인 20.0%는 현재 받는 돌봄이 부족(전기 노인 15.4%)

< 전·후기 노인의 돌봄 충분성, 2023 >



주: 돌봄 충분성은 돌봄을 받는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충분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23

✓ **장기요양급여 이용률**

- 장기요양이용 하는 후기 노인 중 22.9%는 시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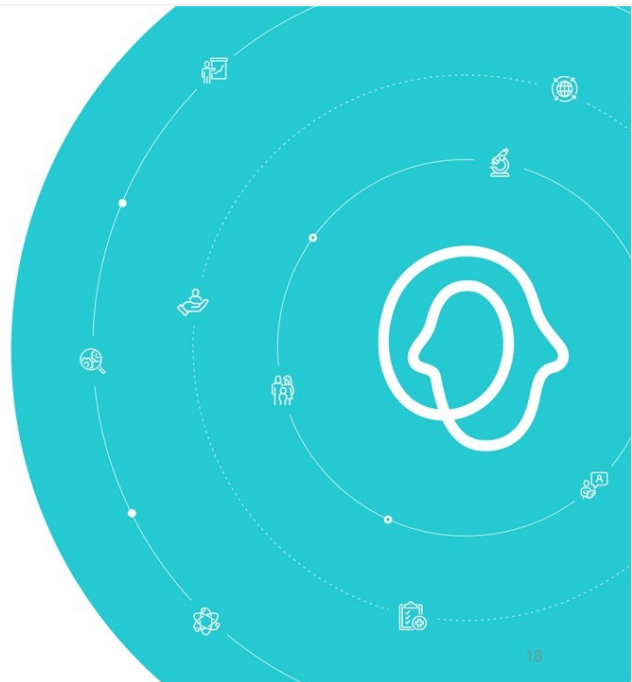
< 전·후기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률, 2024 >

	재가	시설
전기 노인(65-74세)	87.8	15.3
후기 노인(75세이상)	82.7	22.9
전체	83.3	22.0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23

PART.1

나아가며



13. 초고령 사회 후기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 과제

✓ 후기 노인의 의료 및 돌봄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 노후의 생활하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Aging in place : 이하 AIP)하는 것은 노인정책의 핵심 추진 방향,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또한 이를 지향함.
- 노인의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적 보건의료 환경조성
- 돌봄 부족과 사각지대로 인한 시설입소와 병원 장기입원 축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 이루어지도록 설계
- 지역사회와 가족 등의 비공식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 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통계 생산 확대

- 수명 증가에 따른 후기 노인이 증가, 이들의 의료와 돌봄을 비롯한 사회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
- 초고령사회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 “정확한 통계”는 근거기반 정책 추진의 핵심 요소
- 노년기를 세분화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통계생산 구축 필요,
- 노년기 세분화된 연령 기준을 다양하게 활용, 80세 또는 85세 기준 가능한 통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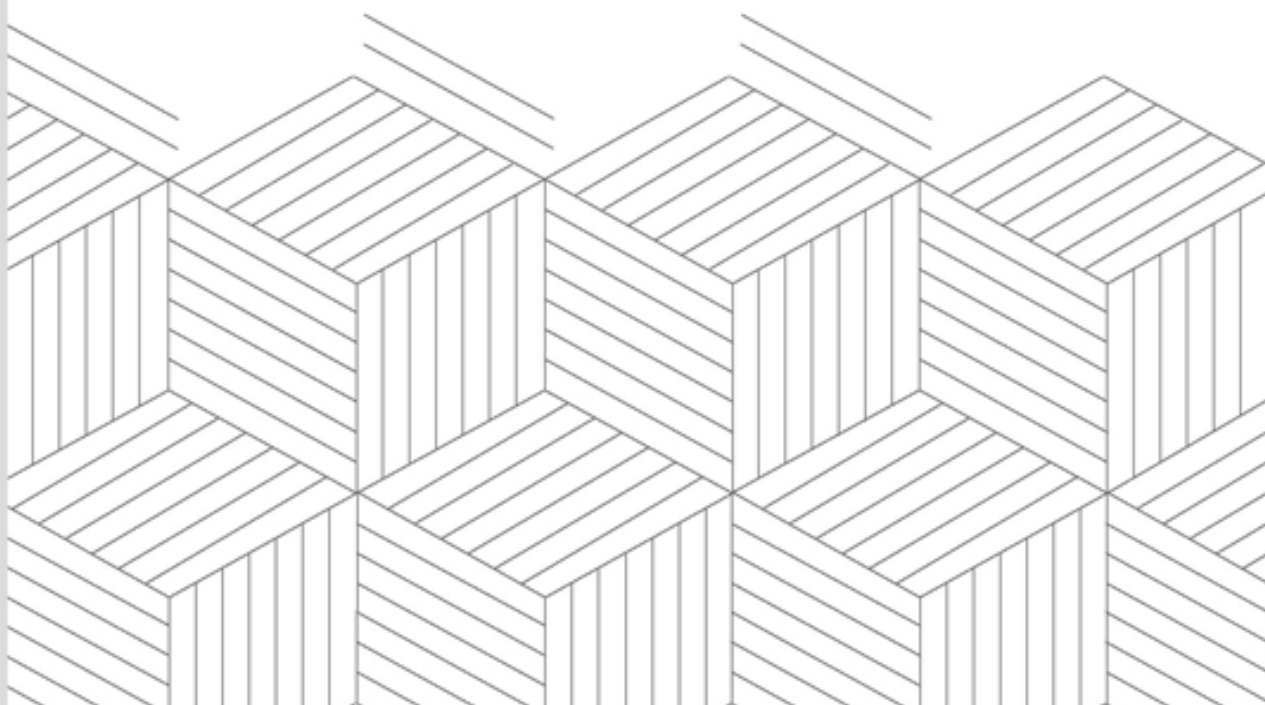
19

감사합니다

세션 1 - 발표 3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장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장

김 주 영



01 들어가며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 배경 및 문제인식

-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정의
- ☑ 차량기술 발전 및 교통안전 정책 추진으로 전체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대형 인명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차별 우려로 정책 추진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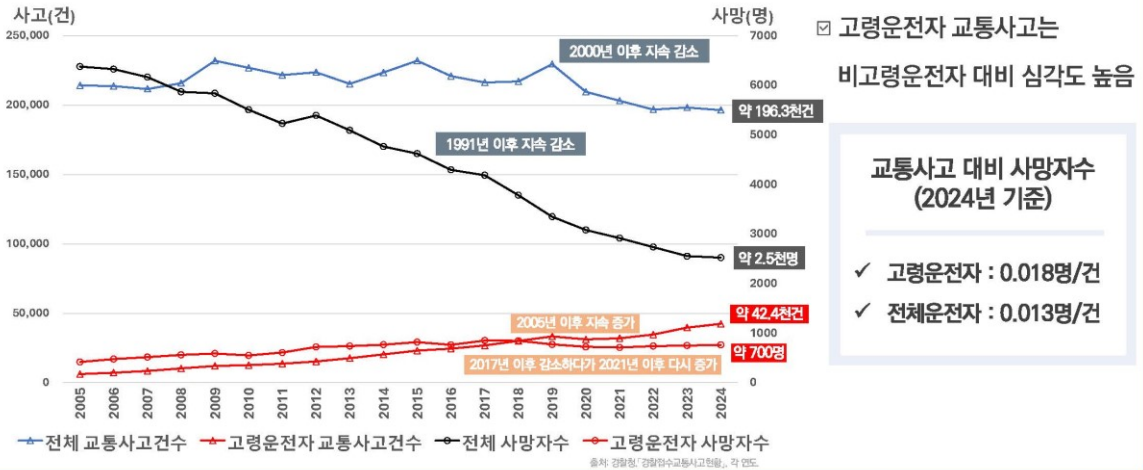
» 필요성

-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 분석** 수행
- ☑ 사고 특성 및 대응방안 도출을 통한 **정책 방향 수립** 필요

02 고령운전자의 사고 추이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2005-2024)



3

03 고령운전면허소지자 현황과 전망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 현황

- ☑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연평균 약 9.2% 증가
- ☑ 2023년 기준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의
약 13.8% 차지

[연령대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2019-2023)]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전체	3,265	3,319	3,373	3,413	3,444	1.3%
65세 미만	2,931	2,951	2,971	2,975	2,969	0.3%
65세 이상	334	368	402	439	475	9.2%
	10.2%	11.1%	11.9%	12.9%	13.8%	

출처: 경찰청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각 연도

» 향후 전망

- ☑ 2023년 18.4% → 2050년 40.1% 증가 전망
- ☑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비중 지속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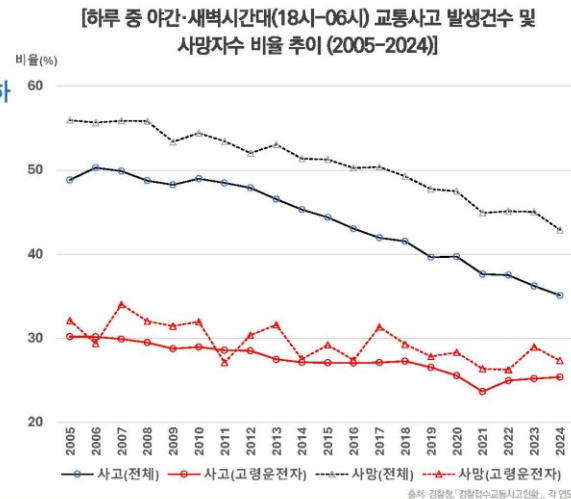
4

» 기본 특성

- ☑ 고령운전자는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 ☑ 야간 운전시 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 존재

» 시간대별 사고 특성

- ☑ 전체 대비 야간·새벽시간대 사고 및 사망자 비율
⇒ 고령운전자보다 전체운전자가 더 높은 수준
- ☑ 고령운전자는 야간·새벽시간대 운전 회피 경향 존재



5

» 기본 특성

- ☑ 고령운전자는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 ☑ 기상 악화시 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 존재

» 기상 요인 영향

- ☑ 기상상태에 따른 사고 영향 분석결과
⇒ 고령운전자와 전체운전자 간 큰 차이 없음
- ☑ 인지반응 저하로 사고 증가 예상되나 실제 데이터에서는
차별성 미확인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비율 (2024)]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전체운전자	고령운전자	전체운전자	고령운전자
맑음	88.2	89.7	84.0	88.0
흐림	3.5	3.3	6.5	4.1
비	6.4	5.4	7.6	6.3
안개	0.1	0.1	0.4	0.7
눈	0.6	0.4	0.6	0.5
기타	1.3	1.1	1.0	0.4

출처: 경찰청 '경찰합수교통사고현황', 각 연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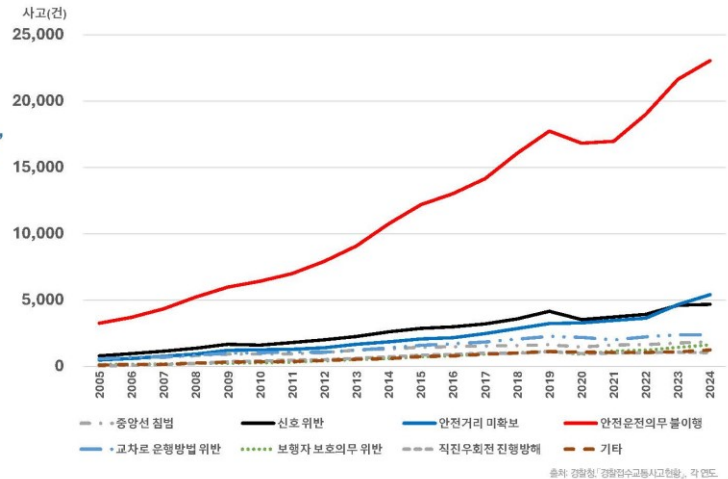
» 법규위반 특성

☑ 2024년 기준 고령운전자 사고의
약 54.4%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 주요 원인

- 1) 전방주시 태만
- 2) 과속·급제동·급과속
- 3) 기상·도로상황 고려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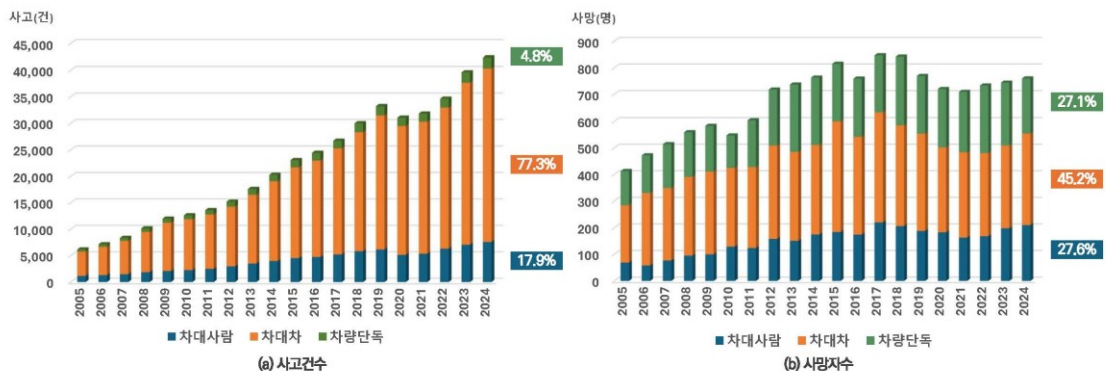
[법규위반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 (2005-2024)]



7

» 사고유형별 추이

[사고유형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2005-2024)] 출처: 경찰청/경찰청수교통사고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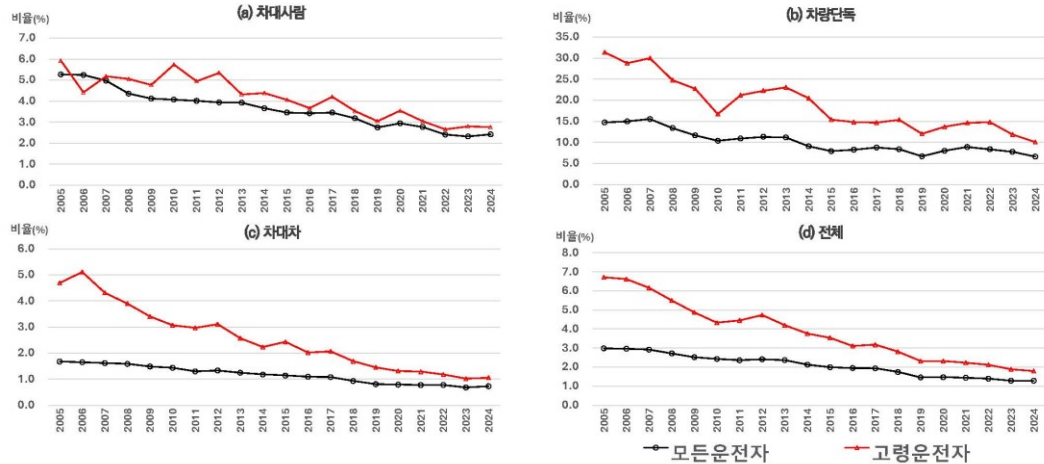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수 | 차대차 0.011명/건 차대사람 0.028명/건 차랑단독 0.101명/건

8

» 사고유형별 비율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 (200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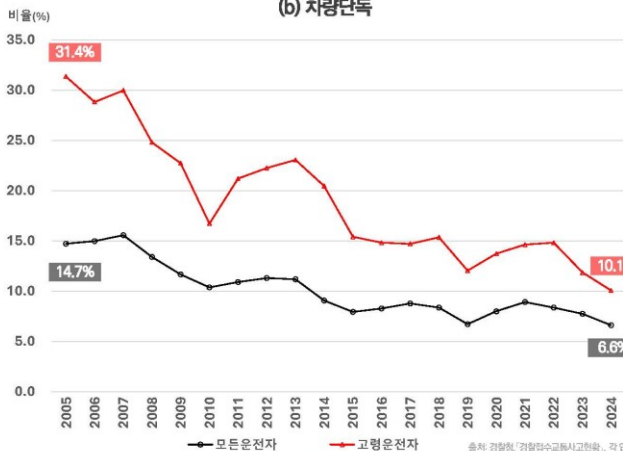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경찰당수교통사고현황」, 각 연도



9

» 사고유형별 비율

(b) 차량단독



출처: 경찰청 「경찰당수교통사고현황」, 각 연도

☑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차량기술 발전 및 교통안전시설 영향

☑ 차량단독 사고가 차대사람, 차대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수 (차량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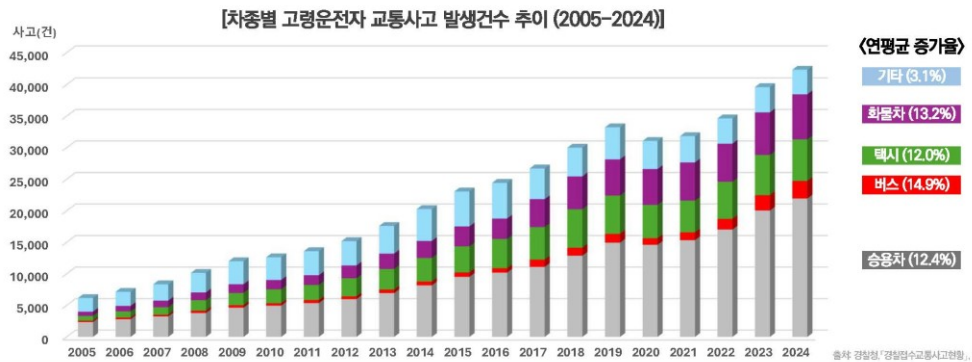
✓ 2005년 : 0.314명/건 (전체 대비 2배 이상)

✓ 2024년 : 0.101명/건 (전체 대비 약 1.5배)

10

» 차종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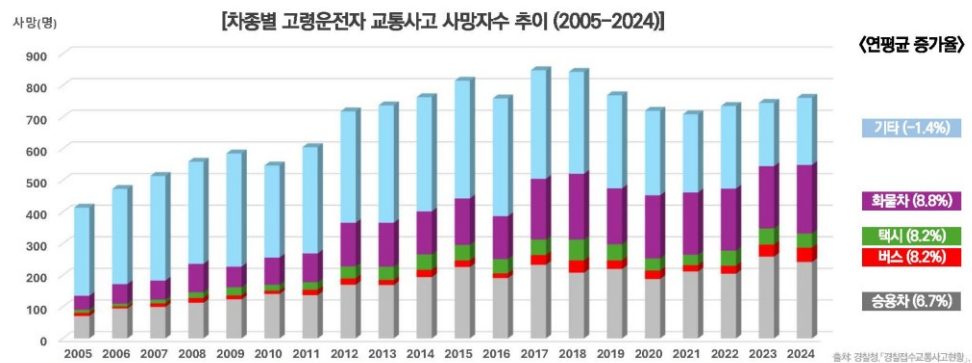
- ☑ 운수종사자 중 고령운전자 비율 23.6% (2023년 기준)
- ☑ 개인택시 51.4%, 버스 17.2% → 운수산업 내 고령화 심화



11

» 차종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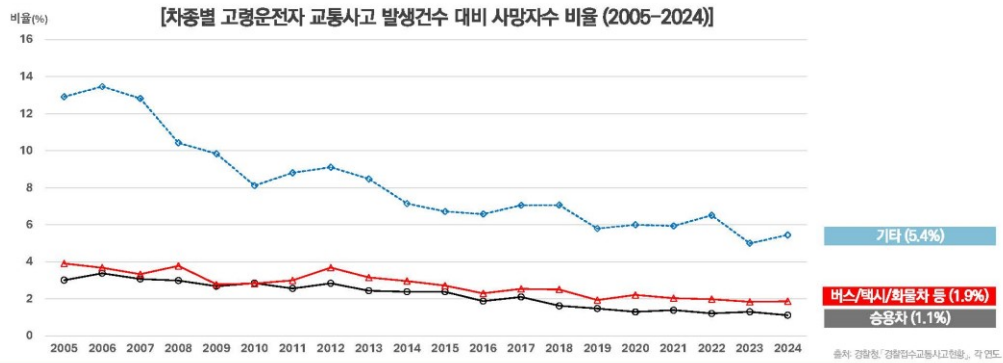
- ☑ 운수종사자 중 고령운전자 비율 23.6% (2023년 기준)
- ☑ 개인택시 51.4%, 버스 17.2% → 운수산업 내 고령화 심화



12

» 차종별 교통사고 1 건당 사망자수 비율

- ☑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수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 교통사고의 심각도는 승용차 < 버스/택시/화물차 < 기타 순



13

» 기타 수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

- ☑ 기타 수단은 농기계, 사륜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사망자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 지방부 농촌지역에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관리 필요

[기타 수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 (200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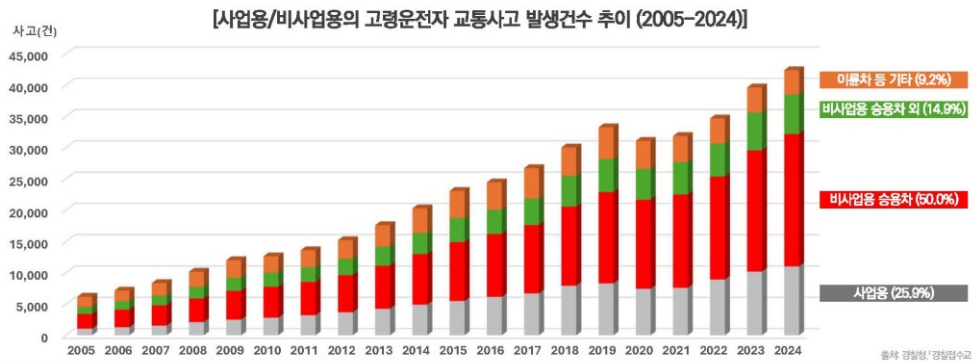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4
이륜차	15.4	9.6	5.7	6.4	5.2
사륜오토바이(ATV)	-	-	13.8	13.9	9.9
원동기장치자전거	16.2	10.2	7.5	5.6	5.5
자전거	13.4	7.2	5.0	3.1	3.8
개인형이동장치(PM)	-	-	-	6.7	2.2
농기계	-	-	-	14.1	14.6
기타/불명	14.3	5.0	18.8	3.0	8.5

출처: 경찰청 「경찰관수교통사고현황」, 각 연도

14

» 사업용/비사업용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 ☑ 사업용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 보험 처리, 사고 대응 방식 상이
- ☑ 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에 있어 차별적 접근 필요



15

» 사업용/비사업용별 추이

-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승용차 제외시 사업용 > 비사업용, 사망자수는 사업용 < 비사업용



16

» 사업용/비사업용별 비율

[사업용/비사업용별, 수단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수 비율]

구분	(단위 : %)				
	전체	버스	택시	화물차	기타/건설기계
사업용	1.3	1.7	0.7	2.5	3.7
비사업용	2.7	1.5	-	3.0	1.7

주: 비사업용 전차는 승용차를 제외함.

출처: 경찰청 「경찰청수교통사고현황」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수 비율

1) **승용차 제외 차량** : 사업용(1.3%) < 비사업용(2.7%)2) **버스** : 사업용(1.7%) > 비사업용(1.5%)

⇒ 재차인원 고려한 사고 확률을 낮추기 위한 관리 필요

3) **택시** : 전량 사업용(0.7%)

⇒ 고령 택시종사자 45.5%, 교통사고 비율 54.0%

4) **화물차** : 사업용(2.5%) < 비사업용(3.0%)

⇒ 타 수단에 비해 교통사고 심각도가 매우 높음

* 등록대수 비사업용 약 321만대, 영업용 약 47만대 수준

* 사망자수 비사업용 약 157만대, 영업용 약 39명 수준

5) **기타/건설기계** : 사업용(3.7%) > 비사업용(1.7%)

17

» 고령운전자 증가 및 교통사고 증가

-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지속 증가**
-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0.7% 증가**
- ☑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비율 2024년 기준 **전체 대비 약 1.4배**
- ☑ 운수종사자 중 고령자 비율 23.6%로 **향후 지속 증가 예상**

» 유형별 사고 특성

- ☑ **차량단독 사고**는 사망자 발생 확률 10.1%로 가장 높은 수준
- ☑ **비사업용**이 사업용 대비 **사망자 발생 비율 2배 이상**
- ☑ **자전거, PM, 농기계** 등 기타 수단도 높은 사망자 비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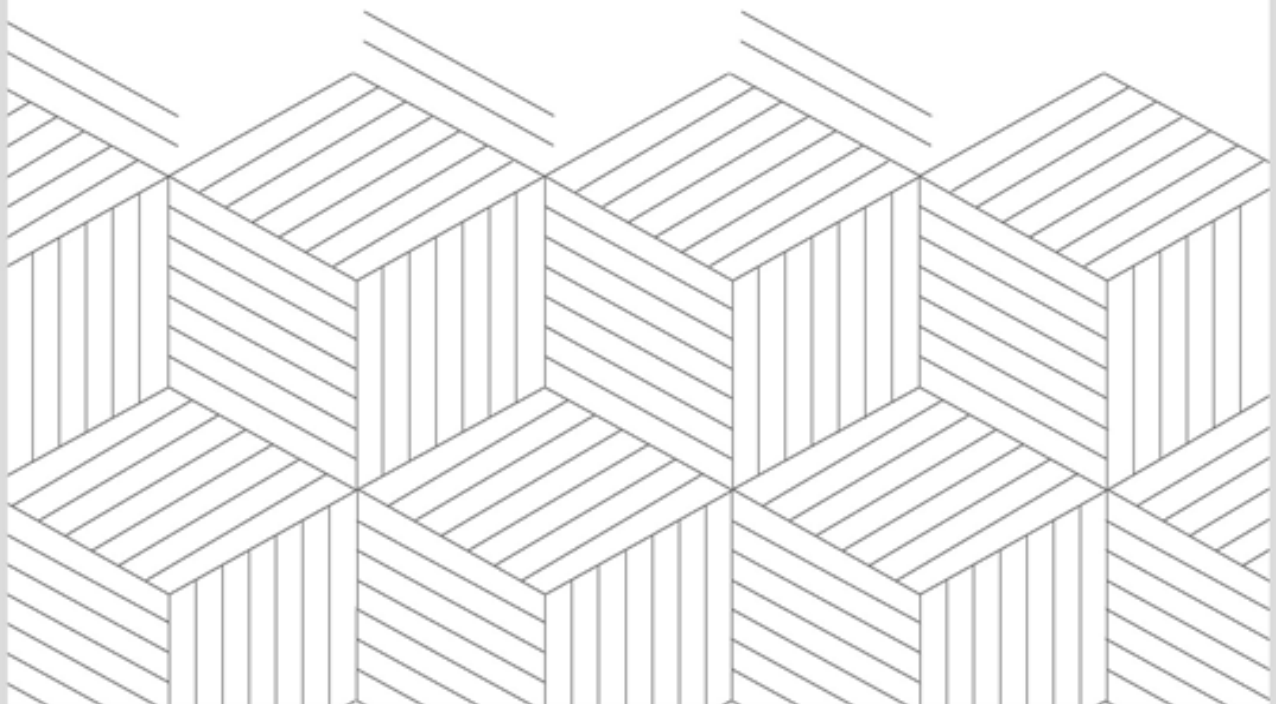
예방대책은 ?

-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예방대책 필요
- ✓ 사업용 고령운전자에 대한 예방대책은 ?
- ✓ 비사업용 고령운전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예방대책은 ?
- ✓ 승용차 고령운전자에 대한 예방대책은 ?
- ✓ 농촌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예방대책은 ?

18

세션 2 - 발표 1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변화와 부부의 고용-돌봄 분담

최선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개요 및 주요 질문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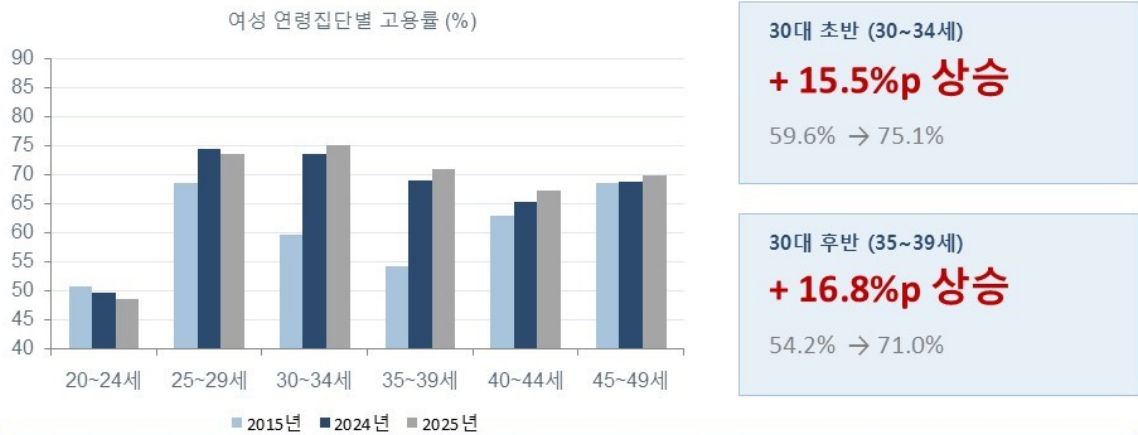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 이후 초저출산 지속 (TFR 0.75, 2024)
- 결혼·출산을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 강화
- 일-가정 양립가능성은 결혼·출산 선택의 핵심 조건
-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와 최근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주요 연구 질문

- 자녀 유무가 남녀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미취학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최근 어떻게 변화했는가?
- 고용을 유지하는 여성의 계층·노동시장 특성은?
-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2 / 15

30대 여성 고용률의 두드러진 상승



30대 여성 고용률의 뚜렷한 상승. 2025년 시점에서 30대 고용률은 저점이 아님. 미혼율 상승이 주된 요인이나 유자녀 여성의 기여도 확인됨.

3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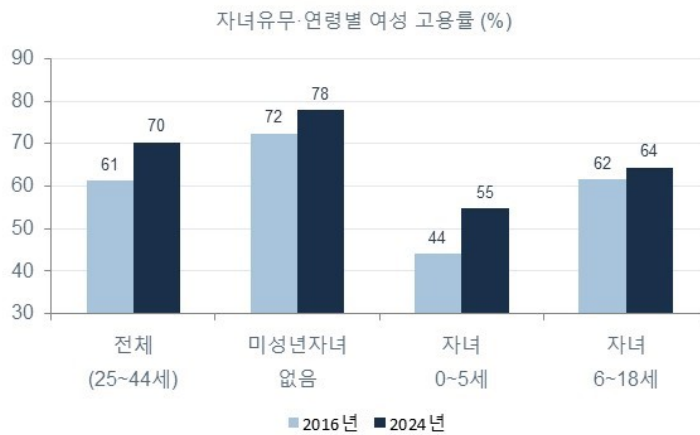
결혼·출산과 고용: 여전한 성별 역할 차이



남성은 결혼·출산 시 고용률 상승, 여성은 반대. 부정적 영향은 2016→2024 사이 다소 완화됨. 기혼여성 +8.3%p, 유자녀여성 +7.0%p 상승.

4 / 15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낮아지는 여성 고용률



주목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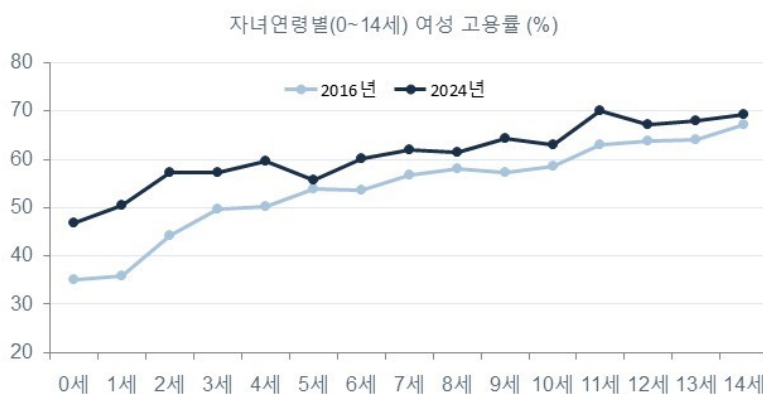
**0~5세 자녀 여성
고용률 10.8%p ↑
(44.0%→54.8%)**

격차 현황 (2024)

미성년자녀 없음: 78.0%
0~5세 자녀: 54.8%
→ **23.2%p 격차 잔존**

어린 자녀의 존재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전히 크나, 10년간 완화되는 추세. 돌봄 대체 서비스 및 제도 확충의 효과로 해석됨.

자녀연령별 여성고용률의 전반적 상승



① 자녀 0~2세 시점
약 10%p 상승
경사 완만해짐
(경력단절 완화)

② 전 연령에서

2024년 곡선이
2016년보다 상위

③ 자녀연령과 여성고용률의
강한 상관관계 지속

출산 전후 고용이탈 현상이 다소 완화됨. 육아휴직 사용 증가, 공보육 확대 등 제도 정비의 효과와 연관됨.

교육수준별 유아녀 여성 고용률 — 격차의 구조

자녀연령별(0~14세) 여성 고용률, 2024 (%)



0세 시점 최대 격차

약 32%p 대졸 58% vs 고졸 26%

6세 이상 → 격차 소멸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고용률 수렴 (약 60%대)

12세 이상 → 역전 현상

고졸이하 고용률이 대졸이상을 추월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C형 원자료, 2016~2024

교육수준을 계층 대리지표로 볼 때, 고학력일수록 영아기 고용 유지가 용이. 2016→2024 전반적 개선 과정에서 계층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짐. 출산·육아의 고용상 불이익이 저학력층에 집중됨을 시사.

7 / 15

유아녀 취업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 자녀연령별

종사상지위 (%) [표 1]

자녀연령	상용근로	임시·일용	비임금
자녀 0~2세	78.3	8.5	13.3
자녀 3~5세	64.9	17.7	17.5
자녀 6~14세	64.7	17.4	18.0
전체	66.7	16.1	17.2

정규직 여부 (%) [표 2]

자녀연령	비정규직	정규직
자녀 0~2세	9.6	90.4
자녀 3~5세	15.2	84.8
자녀 6~14세	18.3	81.7
전체	16.4	83.6

기업규모 & 임금 [표 3-4]

자녀연령	중소기업 (%)	대기업 (%)	평균임금 (만원)	중위임금 (만원)
자녀 0~2세	76.3	23.7	311	300
자녀 3~5세	85.7	14.3	299	270
자녀 6~14세	89.4	10.6	289	250
전체	86.8	13.2	294	250

핵심 시사점

- 자녀가 어릴수록 상용직·정규직·대기업 비중 높음
→ 고용지위가 낮을수록 영아기 고용 이탈 집중
- 자녀연령 낮을수록 임금 수준도 높은 역설적 패턴
- 불이익이 주변부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C형 원자료, 2024

8 / 15

육아휴직 사용 증가 — 그러나 구조적 한계



여성 사용률
(대상자 기준)

72.2%

2024년

남성 사용률
(대상자 기준)

10.2%

2024년

출생아 100명당
부 대상자

70.8명

여성 44.6명

여성의 대상자 기준 사용률은 높지만, 출산 전 이미 노동시장 이탈한 여성은 대상자에서 제외됨. 실제 적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남성 육아휴직은 확대 중이나 여전히 10%대.

9 / 15

육아휴직 사용 증가 — 그러나 구조적 한계



출생아 100명당
실제 여성 사용

33.5명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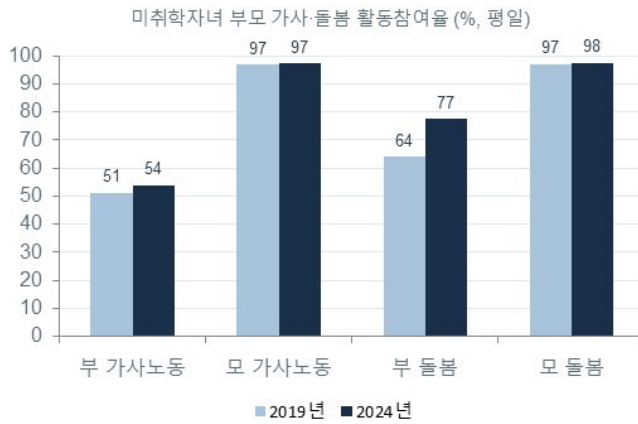
출생아 100명당
실제 남성 사용

7.2명

2024년

9 / 15

미취학자녀 부부의 가사·돌봄 참여율 변화



부 돌봄 참여율

+13.5%p 63.9%→77.4%

모 가사·돌봄

≈97% 변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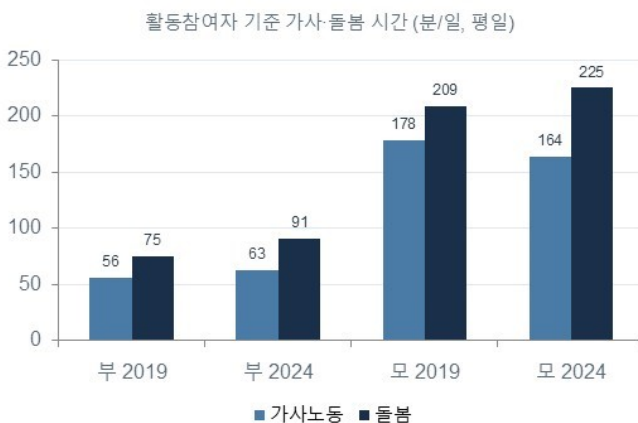
부 가사노동 참여율

+2.7%p 51.3%→54.0%

남성의 돌봄 참여율이 의미 있게 증가했으나, 여성의 97% 참여율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크다. 특히 가사노동 참여 변화는 미미함.

10 / 15

부부의 가사·돌봄 시간 — 여전한 불균형



2024년 기준 남녀 격차

가사노동

1시간 41분

모 164분 vs 부 63분

돌봄

2시간 14분

모 225분 vs 부 91분

가사 격차 추이

소폭 감소

부 +7분, 모 -14분 (2019→2024)

돌봄 시간 추이

공동 증가

부모 모두 +16분 (동일)

미취학자녀 가구에서 가사와 돌봄은 압도적으로 여성의 몫. 남성의 참여 확대 추세는 있으나 격차 해소까지 요원함.

11 / 15

종합 요약

01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지난 10년간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상승(30대 초반 +15.2%p 30대 후반 +16.8%p). 미혼율 증가가 주된 요인이거나, 유자녀 여성의 기여도 존재

02

어린 자녀와 고용의 부정적 관계 지속

0~5세 자녀 여성 고용률 상승(+10.8%p)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녀 없는 여성(78%)과 23.2%p 격차 잔존

03

계층별 양립 기회 불평등 심화

고학력·정규직·대기업 여성일수록 영아기 고용 유지. 저학력·비정규직은 출산 직후 이탈 집중. 불이익의 계층적 집중

04

육아휴직 사용 증가, 구조적 한계 공존

대상자 기준 여성 사용률 72%, 남성 10.2%까지 상승. 그러나 제도 밖(출산 전 이탈) 여성 규모가 여전히 큼

05

가사·돌봄 불평등한 분담 지속

남성 돌봄 참여 증가 추세(+13.5%p)이나, 여전히 가사와 돌봄은 여성에 집중 (가사 격차 1시간 41분, 돌봄 2시간 14분)

/ 15

정책시사점

일-가정 양립 제도의 개선

①

고용보험 밖 여성에 대한 출산·육아 지원 확대

현행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한정. 출산 전 이탈 여성, 자영업자, 비임금근로자에게도 실질적 소득 보전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해야 함.

②

비정규직·중소기업 여성의 제도 활용 여건 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 보장 강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확대, 불이익 방지 실효적 장치 마련 필요.

③

공보육 시설 확충과 접근성 강화

0~2세 영아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특히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접근 가능한 공공 돌봄 인프라 강화를 통해 계층 간 불평등 완화.

13 / 15

성평등한 돌봄 분담을 위한 제도 개혁

④ 여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단독 사용 인센티브 강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에 불과. 급여율 인상을 포함한 육아휴직 의무화 고민 필요.

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 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률 제고 필요. 특히 남성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조직문화·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선도, 기업 인증제 등 정책 수단 병행.

⑥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장기 비전 제시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부부간 평등 분담을 사회 규범으로 자리잡게 하는 장기 캠페인·교육 필요.

14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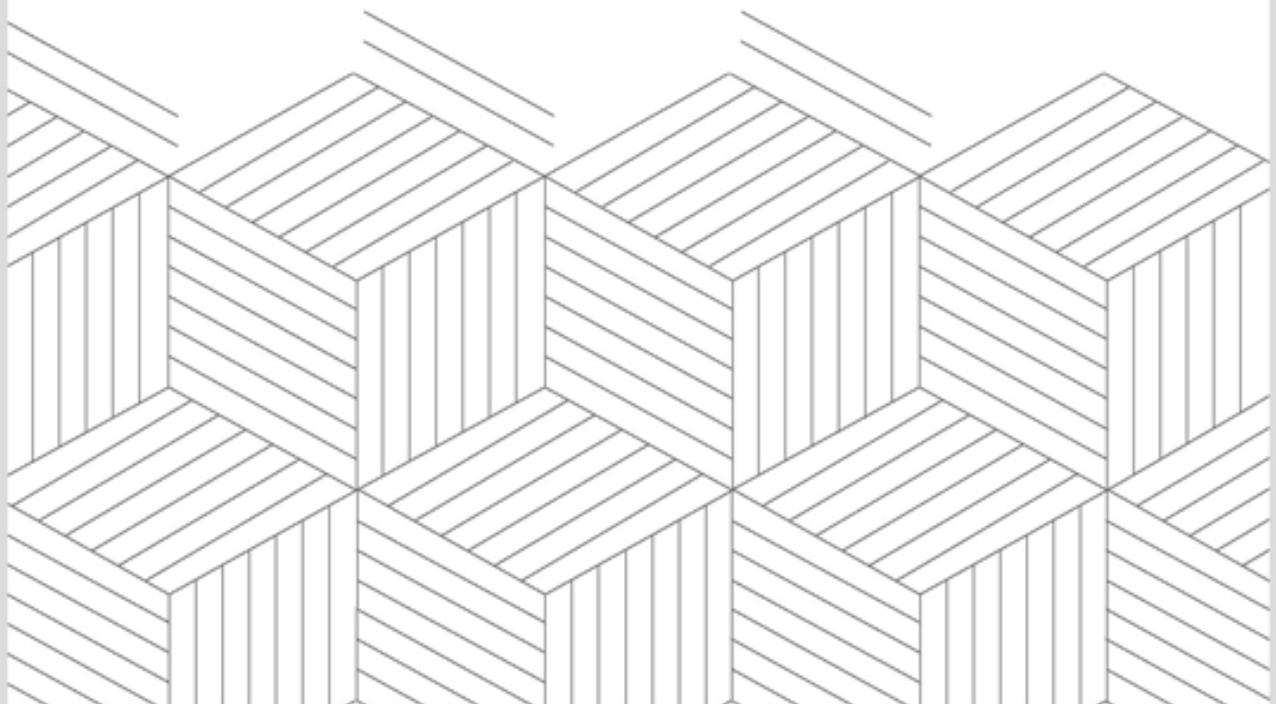
일과 돌봄의 통합

-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고, 고용상 불이익은 계층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 최근의 긍정적 변화(고용률 상승, 육아휴직 증가)는 그 자체로 의미 있으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크다.
- 남성의 돌봄 참여 증가는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제도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 불안정 계층이 일-가정 양립 수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생활시간조사·육아휴직통계, 각 연도

세션 2 - 발표 2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국가데이터연구원
제6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의 변화 추이

2026. 5. 27.(수)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1

들어가며

- ❖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2020년 제외)하여 2024년 최고 수준 경신
2025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사교육비 총액 유지
- ❖ 역대 정부는 사교육 과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사교육 규제, 공교육 내실화·정상화, 입시제도 개선 정책 등)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가계 부담은 물론 교육격차 고착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
- ❖ 이에 유아기(6세 미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기로 구분하여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사교육 과열 현상의 원인 및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초·중고 전체 학생 수 및 사교육비 총액(2007~2025) >



출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국가데이터처·교육부), 교육기본통계(교육부·K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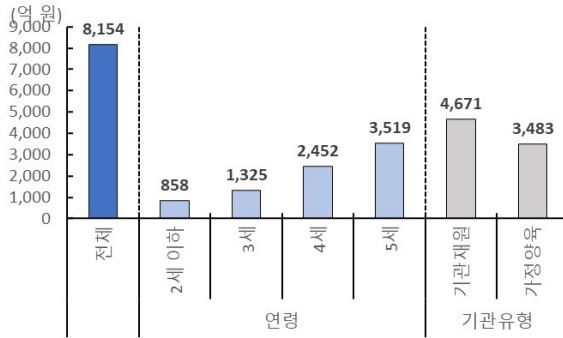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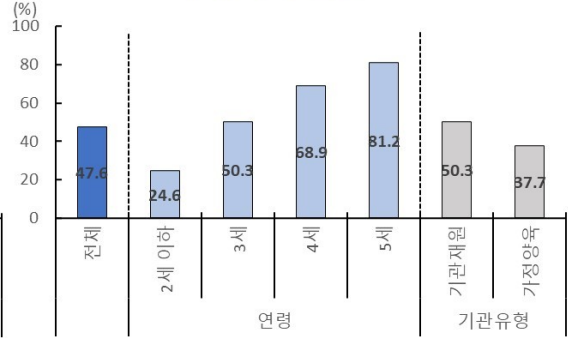
유아기(6세 미만) 사교육비 총액 및 사교육 참여율 (2024, 7~9월)

- ❖ [사교육비 총액] 2024년 7~9월 3개월 간 **8,154억 원** (연 환산시 약 **3.2조 원**)
(기관재원 유아(136.2만 명) 4,671억 원 / 가정양육 유아(36만 명) 3,483억 원)
- 연령 높을수록 총액 증가 : 2세 이하 858억 원 → 5세 3,519억 원
- ❖ [사교육 참여율] **47.6%** (기관재원 유아 50.3% / 가정양육 유아 37.7%)
- 연령 높을수록 참여율 증가 : 2세 이하 24.6% → 5세 81.2%

< 유아기 사교육비 총액(2024년, 7~9월) >



< 유아기 사교육 참여율 >



출처: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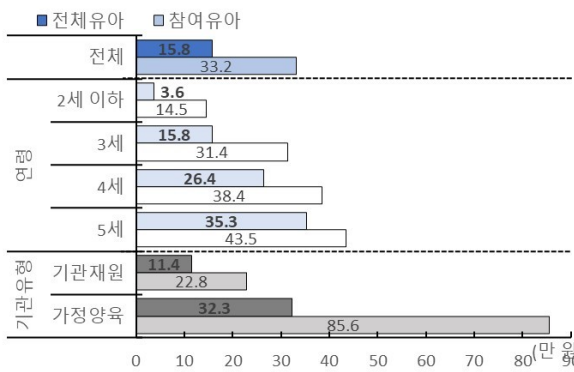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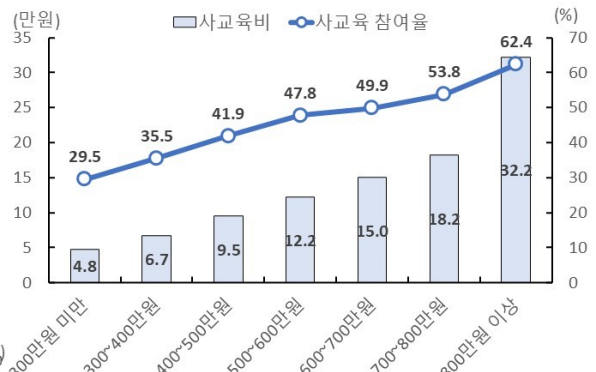
유아기(6세 미만) 월평균 사교육비 및 가구소득별 사교육 현황 (2024, 7~9월)

- ❖ [전체 유아 기준] **15.8만 원**, [사교육 참여 유아 기준] **33.2만 원**
- 기관재원 유아 **22.8만 원** < 가정양육 유아 **85.6만 원** (가정양육 유아 중 3시간 이상 반일제 학원: 145.4만 원, 영어학원: 154.5만 원)
- 일반과목 **34.0만 원** > 예체능·취미·교양 과목 **17.2만 원** (일반과목 중 영어: 41.4만 원)
- ❖ 유아연령(2세 이하: 14.5만 원 → 5세: 43.5만 원), 가구소득(300만원 미만: 4.8만 원 → 800만원 이상: 32.2만 원) 높을수록 증가

< 유아기 월평균 사교육비 >



< 유아기 가구소득별 사교육 현황 >



출처: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03.13.)

한국교육개발원

2-2

유아기(6세 미만) 사교육 수강 목적(2024, 7~9월)

❖ 사교육 수강 목적(복수응답)

- [일반교과] 초등학교 입학 준비(67.6%), 재능계발 및 진로탐색(53.8%), 불안심리(41.0%),
돌봄(9.8%) 등의 순

- [예체능·취미·교양 과목] 재능계발 및 진로탐색(60.3%), 문화예술적 감수성 함양(50.1%),
사회성 발달(23.8%), 돌봄(18.2%) 등의 순

➤ '재능계발 및 진로탐색' 목적 뿐만 아니라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 '초등 입학을 앞둔 학부모의 불안심리'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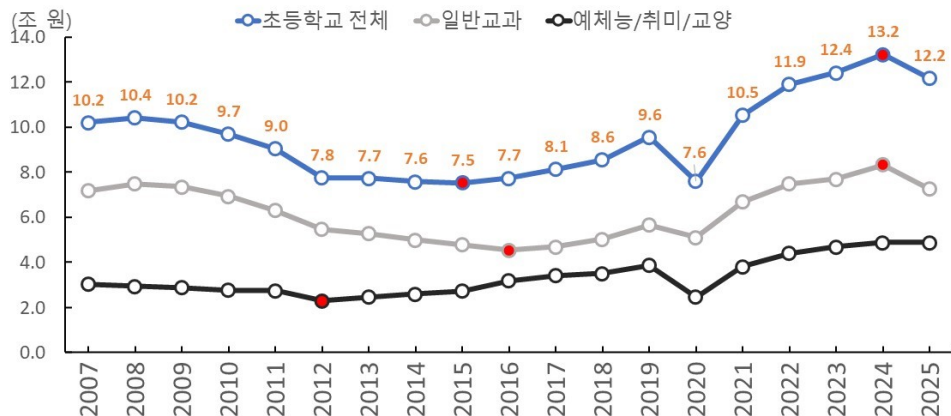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2007~2025)

❖ 2015년(7.5조 원)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증가 경향(2020년 제외)

특히, 2021년부터 급증하여 2024년(13.2조 원) 최고치에 달한 후 2025년(12.2조 원) 소폭 감소

❖ [일반교과] 201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2024년까지 상승세(2020년 제외)를 보인 후 2025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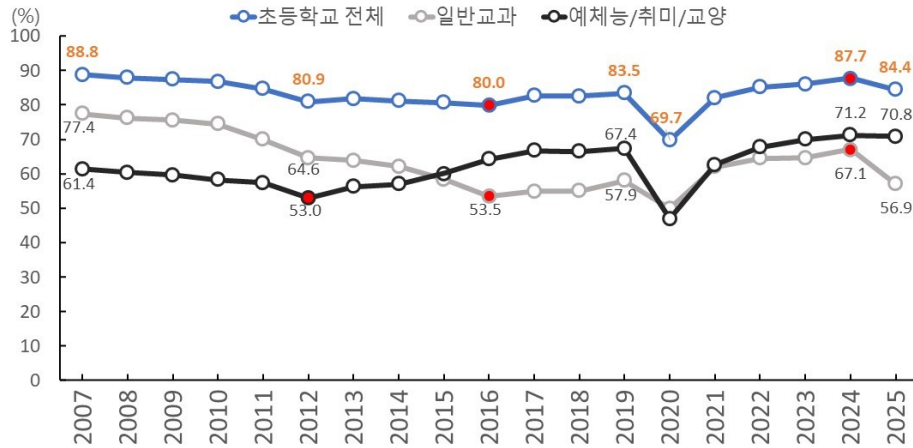
❖ [예체능·취미·교양 과목] 2012년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2020년 제외)



3-2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2007~2025)

- ❖ 2016년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2024년(87.7%)까지 증가 추세(2020년 제외)를 보이다가 2025년(84.4%) 소폭 감소
- ❖ [일반교과] 2016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2024년까지 다시 증가(2020년 제외)하다가 2025년 소폭 감소
- ❖ [예체능·취미·교양 과목] 2012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5년 이후로는 일반교과보다 높은 참여율(2020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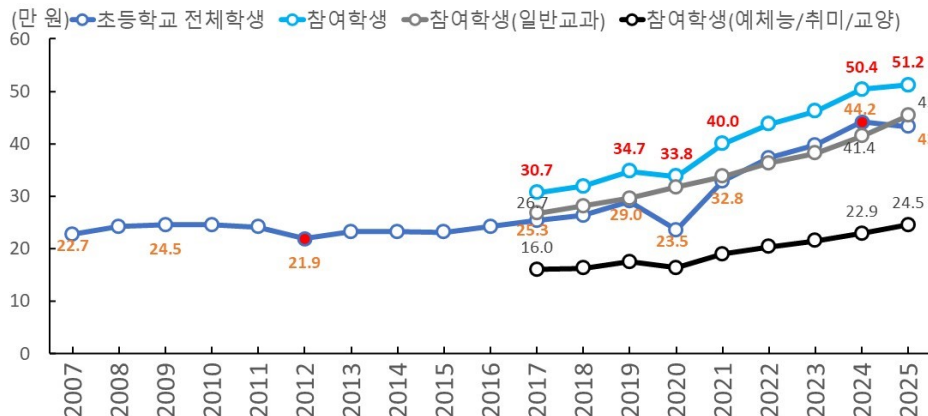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3-3

초등학교 시기 월평균 사교육비(2007~2025)

- ❖ [전체 초등학생 기준] 2012년(21.9만 원)부터 2024년(44.2만 원)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2020년 제외)를 보이다가 2025년(43.3만 원) 소폭 감소
-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2020년 제외)하여 2025년(51.2만 원) 최고치
- ❖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일반교과 : 2020년을 포함하여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증가, 예체능·취미·교양 과목도 증가 추세



한국교육개발원

3-4

초등학교 시기 학년별 사교육 현황(2019, 2025) 및 사교육 수강 목적(2025)

-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일반교과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증가. 반면,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은 감소 경향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교육 과목 유형이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에서 일반교과 중심으로 변화

학년	사교육 참여율 (%)				참여학생 사교육비 (만원)			
	일반교과		예체능/취미/교양		일반교과		예체능/취미/교양	
	2019	2025	2019	2025	2019	2025	2019	2025
1학년	49.0	44.5	78.5	77.3	21.8	36.1	18.2	24.6
2학년	54.4	48.1	78.4	79.9	24.6	36.0	19.2	26.8
3학년	59.6	55.8	75.1	77.1	28.5	41.1	18.6	25.5
4학년	60.3	60.5	65.0	71.1	29.8	46.3	16.9	24.9
5학년	64.4	63.9	58.7	66.6	33.1	50.3	15.1	22.5
6학년	60.3	64.2	48.5	56.3	37.6	53.8	15.5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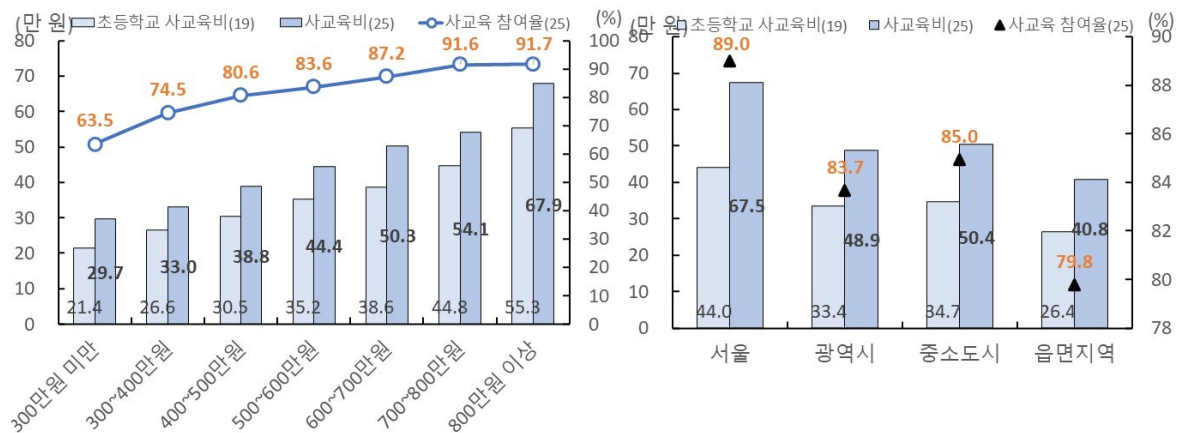
❖ 사교육 수강 목적(복수응답)

- [일반교과] '학교 수업 보충'(84.8%), '선행학습'(40.9%), '보육'(21.5%) 등의 순
- [예체능·취미·교양 과목] '취미, 교양, 재능개발'(92.9%), '보육'(27.8%) 등의 순
- 초등 시기에는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방과 후 자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3-5

초등학교 시기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별 사교육 현황(2019,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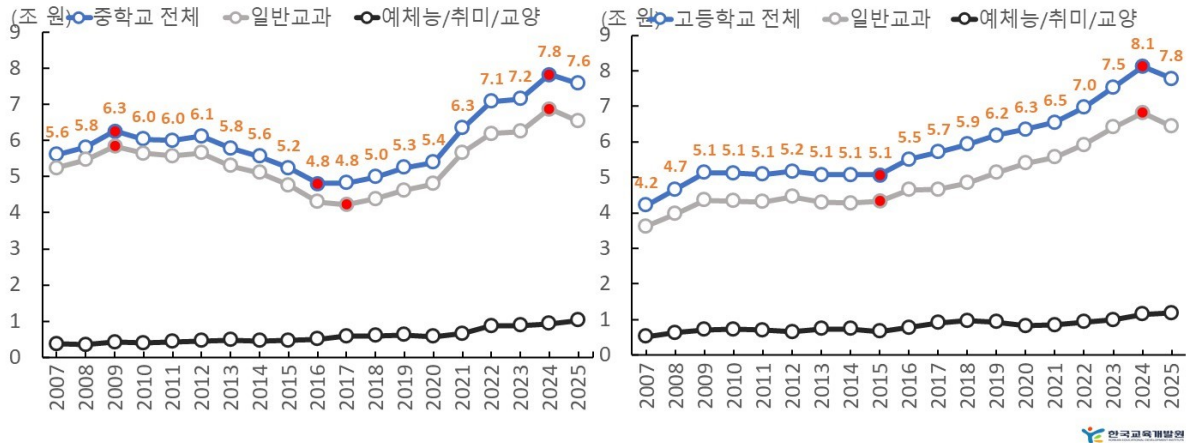
- ❖ 가구소득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참여학생 기준) 지출 규모 점차 증가(2019년, 2025년 동일한 경향)
- ❖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서울과 광역시·중소도시 간 사교육 격차, 도시와 읍면지역 간 사교육 격차를 보임.
- 부모의 경제력과 지역 간 사교육 접근성의 차이가 사교육 참여율 및 지출 규모의 차이로 나타남.



4-1

중·고등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200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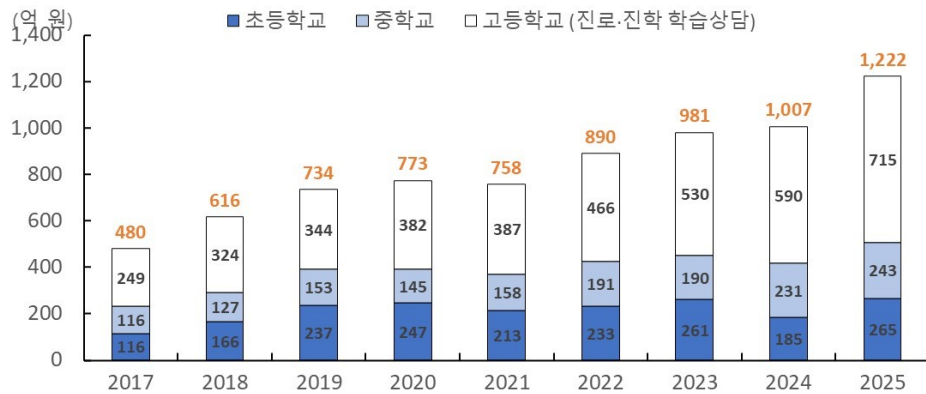
- ❖ [중학교] 2009년(6.3조 원)부터 2016년(4.8조 원)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매년 증가
특히, 2020년 이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24년 7.8조 원에 이르렀다가 2025년(7.6조 원) 소폭 감소
- ❖ [고등학교] 2015년까지 총액 증가가 정체되었으나,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 8.1조 원에 달하였다가 2025년(7.8조 원) 소폭 감소
- 이 시기는 일반교과와 사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 및 '일반교과'의 변화 패턴이 유사



4-2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비 총액(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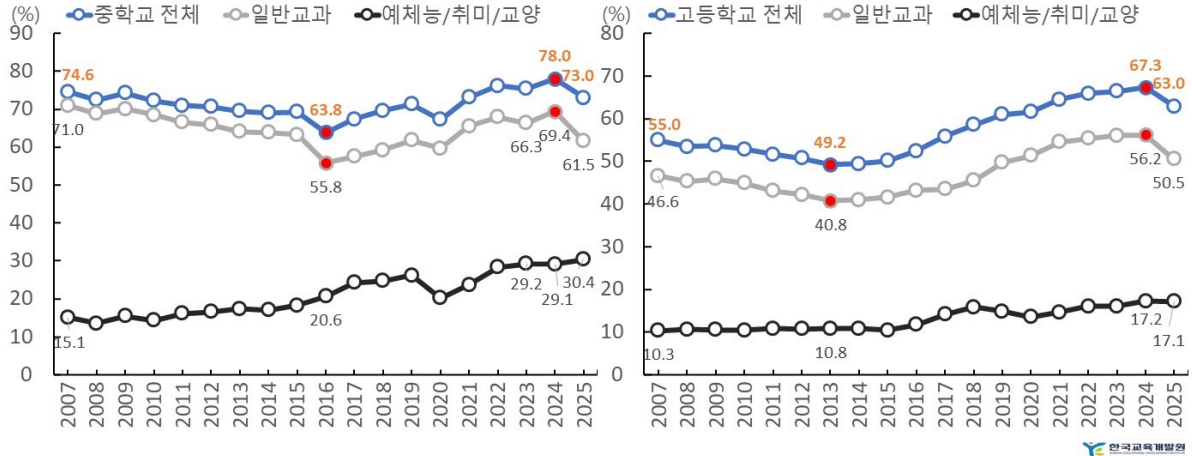
- ❖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입제도가 다양화되었고, 2007년부터는 정시(48.5%)보다 수시(51.5%) 모집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점차 수시전형 중심 입시구조가 본격화되기 시작 → 이를 계기로 입시 컨설팅 사교육 등장(생기부 관리, 진로설계, 진로·진학 상담 등)
- ❖ 초·중·고 전체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비 총액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증가
- 특히, 대학입시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시기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빠르게 상승



4-3

중·고등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200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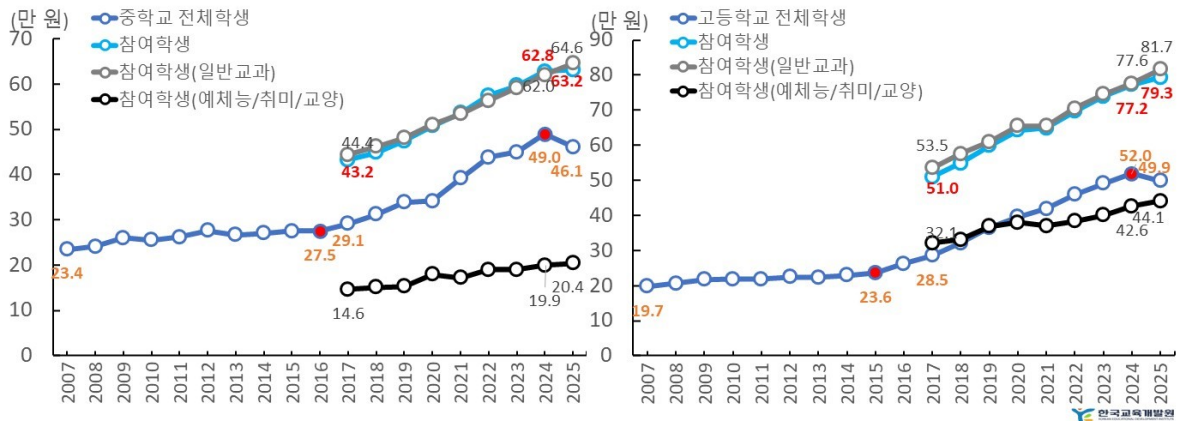
- ❖ [중학교] 2016년(63.8%)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2024년(78.0%)까지 증가 추세(2020년 제외)를 보이다가 2025년(73.0%) 소폭 감소
- ❖ [고등학교] 2013년(49.2%)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4년 67.3%에 이르렀다가 2025년(63.0%) 소폭 감소
- 고물가 지속 현상과 그에 따른 학원비 인상 현상은 가계의 학원비 부담을 가중시켜 사교육 미참여 학생 증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임.



4-4

중·고등학교 시기 월평균 사교육비(2007~2025)

- ❖ 전체 중학생 기준으로 2016년까지, 전체 고등학생 기준으로 2015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 최고치(중: 49.0만 원, 고: 52.0만 원)에 이르렀으나, 2025년 소폭 감소
- ❖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중·고등학생 모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증가
- 물가상승 및 학원비 인상으로 사교육 미참여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남.



4-5

중·고등학교 시기 사교육 수강 목적(2025)

❖ [일반교과] 중학교는 '학교 수업 보충', '선행학습', 고등학교는 '학교 수업 보충', '진학 준비' 등의 순
[예체능·취미·교양 과목] 중학교는 '취미/교양/재능 개발', 고등학교는 '진학 준비'가 1순위

➢ 중학교 시기에는 '학교 수업 보충' 및 '선행학습'을 위해,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 수업 보충' 및 '진학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복수응답, %)

	일반교과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	학교수업보충	기타
중 학교	28.7	6.7	44.1	87.2	3.1
고등학교	54.4	5.3	27.0	79.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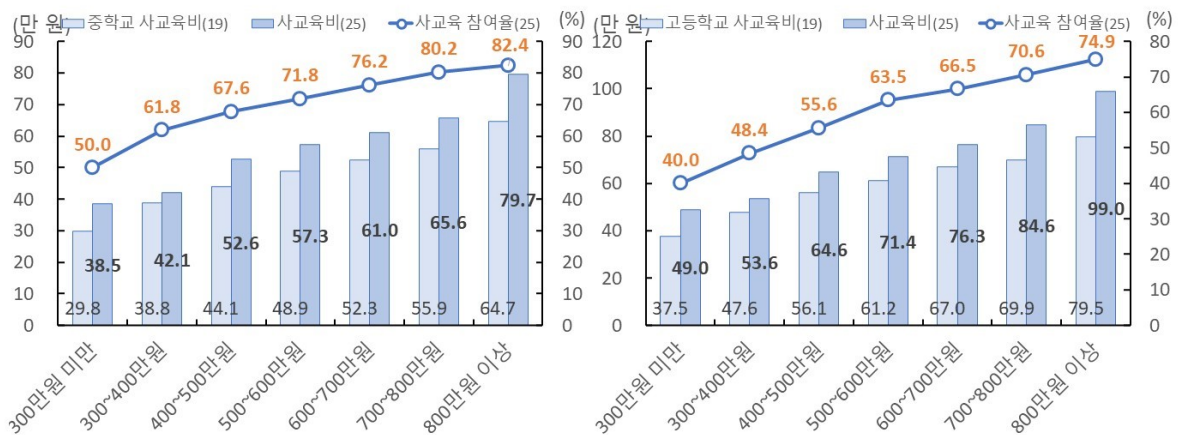
	예체능/취미/교양				
	진학준비	학교수업보충	취미/교양/재능개발	친구를 사귀기 위해	기타
중 학교	20.5	5.0	90.2	8.2	1.2
고등학교	65.2	9.3	56.0	3.3	0.2

한국교육개발원

4-6

중·고등학교 시기 가구소득별 사교육 현황(2019, 2025)

❖ 초등 시기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참여학생 기준) 지출 규모 점차 증가
❖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300만 원 미만' 가구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유아기(27.4만 원) < 초(38.2만 원) < 중(41.2만 원) < 고(50.0만 원)로 올라갈수록 점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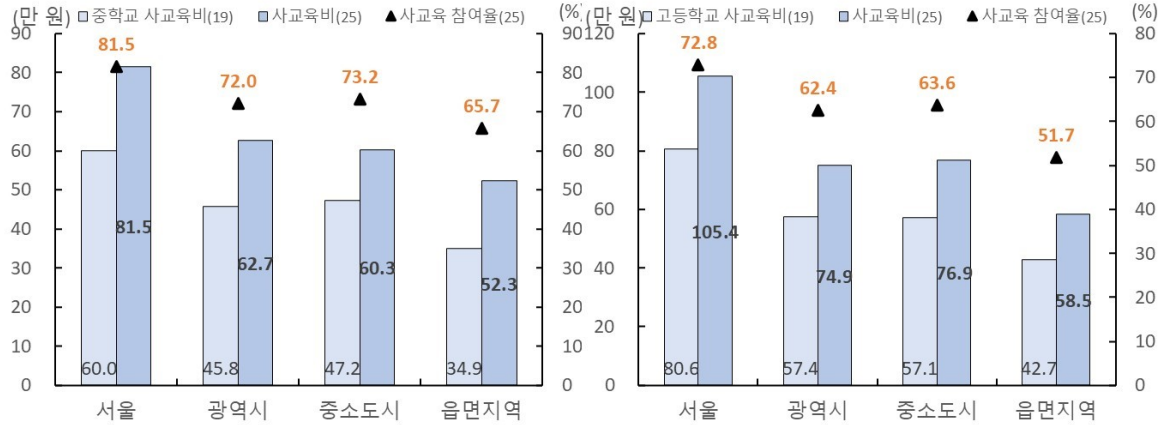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4-7

중·고등학교 시기 지역규모별 사교육 현황(2019, 2025)

- ❖ 지역규모에 따라라도 중·고등 시기 모두 뚜렷한 사교육 격차를 보임.
- ❖ 서울 지역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참여학생 기준)가 읍면지역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지역 간 사교육 격차 또한 유사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2019년, 2025년 동일한 경향).



한국교육개발원

5

역대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2007~2016) 사교육 감소 및 유지 시기

노무현정부	'0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이명박정부 (‘08~‘12)	방과후학교 활성화,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 기초학력부진학생 책임지도, 사교육없는학교 운영, 특목·자사고 입시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및 정시 논술고사 폐지, 수능-EBS 70% 연계 등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 정책” 강력 추진
박근혜정부 (‘13~‘16)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억제, 선행교육 규제 등을 추진하며 이전 정부 정책 기조 유지

❖ (2016~2025) 사교육 증가 시기

문재인정부 (‘17~‘21)	사교육 경감 중점 정책 미발표 및 이전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논의, 문·이과 통합 수능, 서울주요대학 정시 비율 40% 확대 급선회 등 입시정책 급변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 증가
윤석열정부 (‘22~‘25)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정책”(2023.06.) 발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특구지역/고소득층에 유리한 서울주요대학 정시 비율 40% 정책 유지

- 역대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은 어느 정도 사교육 부담 경감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 구조와 높은 교육열 속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국교육개발원

6

사교육 과열 현상의 원인

➤ 사교육 과열 현상은 사회경제적 요인, 교육제도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

❖ 고착화된 대학 서열 속 치열한 입시경쟁

- 고교 내신 상대평가, 전국단위 일제고사 수능 등을 통한 대학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대학 서열을 고착화
-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 부족,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대
- “의약계열·명문대학 진학이 사회적 지위 및 안정된 직업 획득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치열한 입시경쟁 유발

❖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 공교육의 역할(전인교육, 보편교육)과 학생·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기대(입시준비교육,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 간 차이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

❖ 입시 정책의 잦은 변화와 복잡성

- 대학 간 선발기준이 상이하고 거의 매년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 전국대학 입시를 분석해야 하는 일반고는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움.
- 이에 학부모는 입시 컨설팅 사교육에 의존하여 정보를 획득하려는 경향을 보임.

❖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사교육 과열 현상을 강화

- 소득·지역에 따른 교육환경과 사교육 접근성의 차이가 학업성취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사교육 수요를 불러일으킴.

한국교육개발원

7

사교육 과열 완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 사교육 문제의 해결은 공교육 역할 강화, 입시제도 개편, 사교육시장 관리,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가능

❖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학습플랫폼 활성화,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실여건 개선, 교사의 AI·디지털교육 전문성 강화

❖ 취약계층·교육소외지역·중하위권 학생 지원 및 사교육 없이도 양질의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

- 지역 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및 멘토링 지원 확대, 지자체 공공교육 지원 사업 확대
- 돌봄 목적의 불필요한 사교육 완화를 위한 양질의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 학생 성장 중심 공교육 전환 및 대입제도 개선

- 강의식(설명식) 수업 → 탐구형 수업(토론, 프로젝트, 글쓰기 등)을 통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함양 지원
- 지필평가(선다형), 서열화 평가 → 탐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전 교과 성취평가제
- ‘탐구형 수업 - 과정 중심 평가’와 연계한 학생 성장 중심 대입전형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학교 수업 참여 유도

❖ 편법·불법 사교육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회구조 및 국민의식 개혁 운동 전개

- 다양한 삶과 진로가 존중 받는 사회로의 전환,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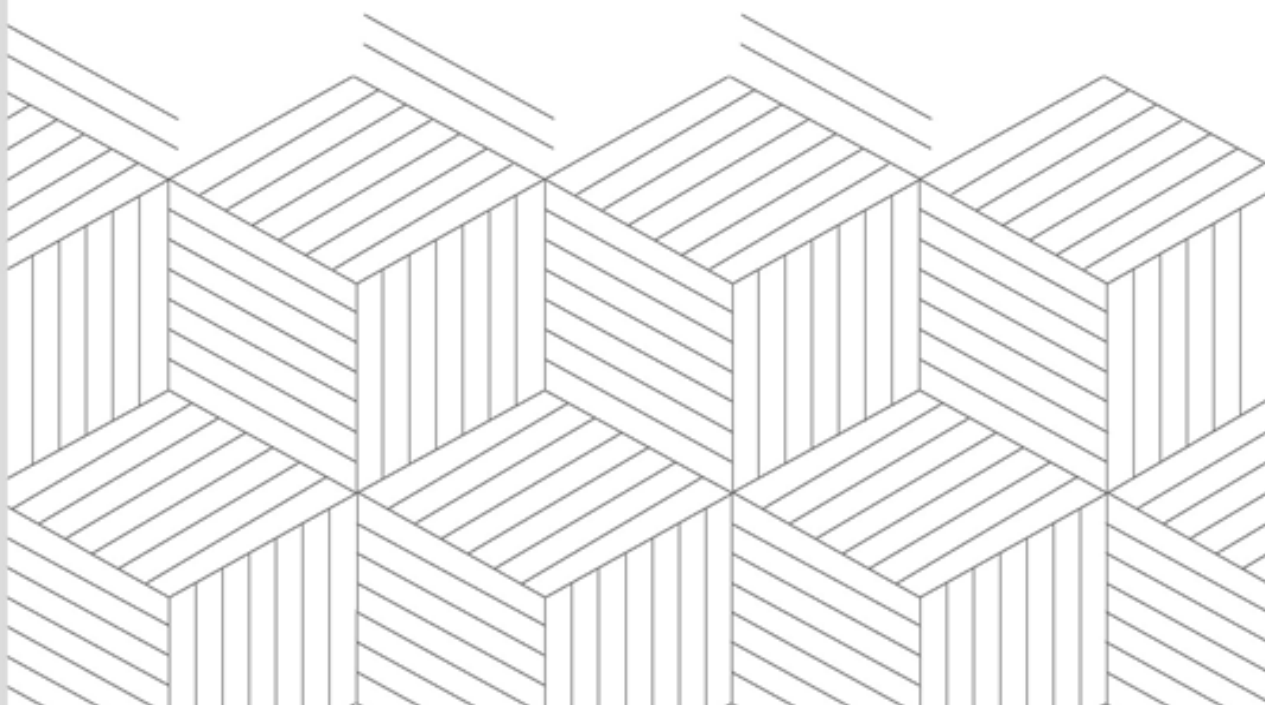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감사합니다.

세션 2 - 발표 3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득계층별 여가행태의 현황과 추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선임연구위원

제6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6년 5월 27일(수)

소득계층별 여가행태의 현황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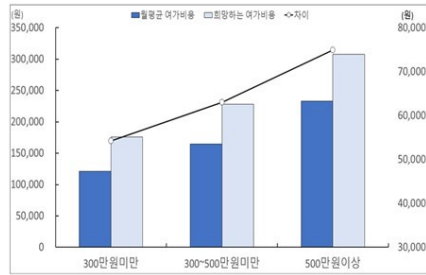
1

개요

- ‘여가활동이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난다’
 - ‘여가활동과 관련된 금전비용의 사용에서 차이가 난다’
 - 예를 들어
 -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여가활동을 하고, 더 많은 비용을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가?
 -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부담을 느껴 소득이 낮은 계층이 실제 여가활동을 적게 하고 있는가?
 - 소득이 다른 계층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인식,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 소득계층 구분
 - 일반적으로 평균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행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의
구간 값의 비율을 고려하여
①300만원 미만, ②300만원~500만원 미만, ③500만원 이상 등 3집단으로 구분함
- 결국,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여가활동(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여행 등)에 대한 특성과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함

1. 소득계층별 여가활동 실태

[그림 1] 소득계층별 월평균 여가비용과 희망하는 여가비용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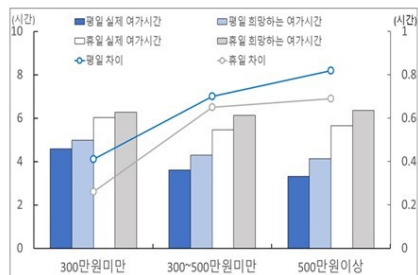
주: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월평균 여가비용

- 여가생활을 위해 한달 평균 지출하는 비용과 희망하는 여가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소득간 약 1.9배 차)
- 희망여가비용과 월평균여가비용의 차이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남(54,272원/63,067원/74,939원)
- 소득이 높은 집단이 여가비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을 더 희망
- 월평균 여가비용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소득계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과 비교해 약 2배 이상 증가폭 (300만원 미만 104,774원(2020)→121,412원(2024) : 16,640원 ↑ 500만원 이상 195,842원(2020)→232,914원(2024) : 37,072원 ↑)
- 코로나19 기간(2021년 조사) 5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여가비지출은 증가, 300만원 미만과 300~500만원미만은 전년대비 감소

1. 소득계층별 여가활동 실태

[그림 3] 소득계층별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의 차이(평일과 휴일)



주: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여가시간

-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소득이 높을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소득의 효과와 함께 평균연령과 혼인상태, 미취학아동 자녀 등의 변인이 고려됨 (300만원 미만(6시간 1분) > 500만원 이상 집단(5시간 40분) > 300~500만원 미만 집단(5시간 28분))
- 평일과 휴일,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하는 여가시간의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남
- 소득이 높은 집단이 실제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현재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길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

1. 소득계층별 여가활동 실태

[여가활동 참여개수]

지난 1년동안 한변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

13개(①집단):16개(②집단):18개(③집단)

[여가활동 동반자]

코로나 극성기(21년 조사), 혼자서 3.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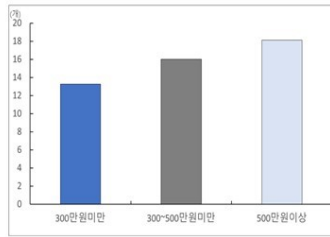
300~500만원 가족들과 함께 (여러자녀있는 가문자 다)

[동호회활동과 지속적 여가활동 참여비율]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여가활동 참여

[그림 4] 소득계층별 지난 1년동안 한변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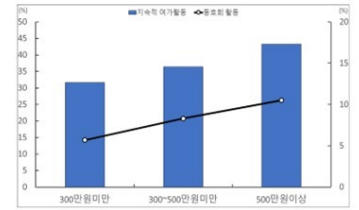
주: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표 3> 소득계층별 여가활동 동반자 변화 추이_1순위 기준

구분	전체	전체	소득계층 (%)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20년	혼자	60.0	63.2	59.4	58.4
	가족	28.8	27.6	30.0	28.4
	그외	11.2	9.3	28.4	13.2
2021년	혼자	63.6	67.7	62.2	61.6
	가족	28.8	26.4	29.7	29.8
	그외	7.6	5.9	8.1	8.6
2022년	혼자	51.8	55.1	50.5	51.1
	가족	33.5	33.8	35.9	31.1
	그외	14.7	11.0	13.6	17.8
2023년	혼자	50.5	55.2	49.8	48.9
	가족	34.0	33.0	35.9	33.1
	그외	15.5	11.9	14.3	17.9
2024년	혼자	54.9	59.4	53.8	53.5
	가족	29.8	28.3	33.0	28.3
	그외	15.3	12.3	13.2	18.2

주: '그외'는 친구와 연인, 동호회, 직장동료, 기타를 응답한 경우 포함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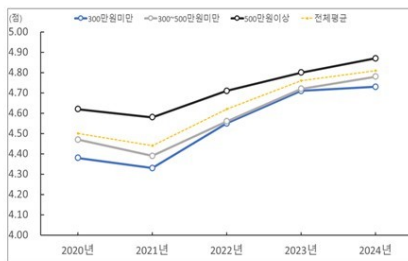
[그림 5] 소득계층별 동호회 활동과 지속적 여가활동 참여 비율 차이



주: 1)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2) 7점 척도(1: 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매우 그렇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4.

1. 소득계층별 여가활동 실태

[그림 6] 소득계층별 여가생활 만족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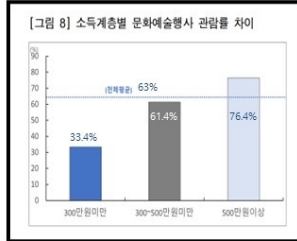


주: 1) 연도별로 조사시기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임
2) 7점 척도(1: 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매우 그렇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여가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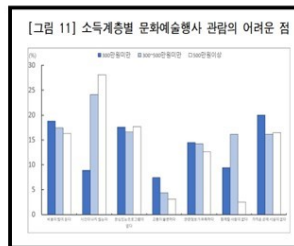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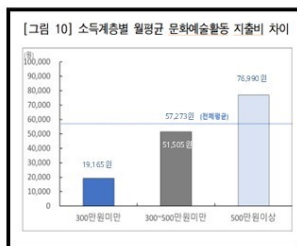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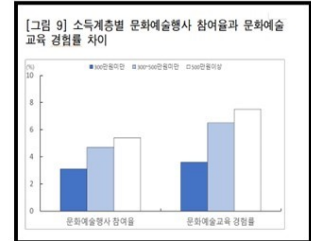
- 소득계층별 여가활동과 관련된 자원사용과 활동참여에서의 차이는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서 소득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됨
-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매년 같은 추이를 나타냄

2. 문화예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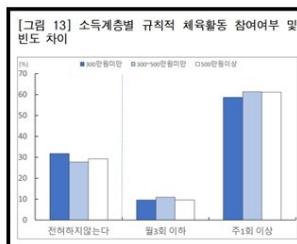
<표 4>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복수응답) (%)

구분	전체	소득계층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문학행사	1.0	0.6	1.0	1.2
미술전시회	5.6	2.9	4.6	7.4
서양음악연주회	1.4	0.8	0.8	2.1
전통예술공연	2.4	3.6	2.0	2.1
연극	5.9	1.3	4.7	8.6
뮤지컬	6.4	1.2	4.4	9.9
무용	0.4	0.3	0.1	0.5
영화	57.0	24.0	55.3	71.7
대중음악, 연예	14.6	10.4	12.8	17.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3. 스포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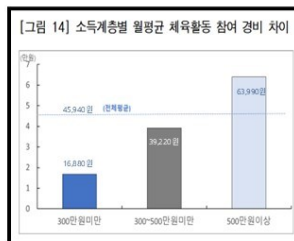


<표 5> 체육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 (미참여자, 1순위 기준) (%)

구분	전체	소득계층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가용시간 부족	54.6	30.4	55.9	54.8
소득수준 낮음	2.1	4.2	2.1	1.2
지출비용 부담	2.8	4.3	3.6	1.4
시설 접근성 낮음	3.9	5.3	3.8	3.3
건강상 문제	10.4	24.9	6.7	1.9
동반 참여자 부재	1.4	1.9	1.9	0.8
정보 부족	3.8	3.7	4.0	3.8
프로그램 부족	1.7	0.3	1.7	2.2
관심부족	9.9	9.0	8.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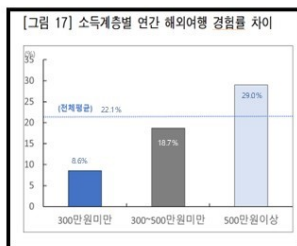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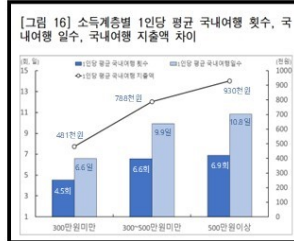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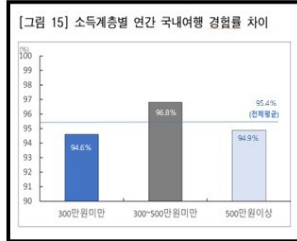
<표 6> 소득계층별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유형 차이 (%)

구분	전체	소득계층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공공체육시설	33.7	42.6	36.1	28.0
민간체육시설	20.1	7.6	18.9	26.5
학교체육시설	6.2	2.8	6.9	7.0
직장체육시설	0.8	0.5	0.9	0.9
자가시설	2.4	1.6	2.6	2.6
기타체육시설	7.0	11.8	5.8	6.0
이용하지 않음	29.7	33.1	28.8	29.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4.

4.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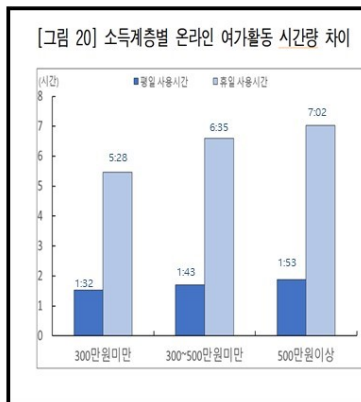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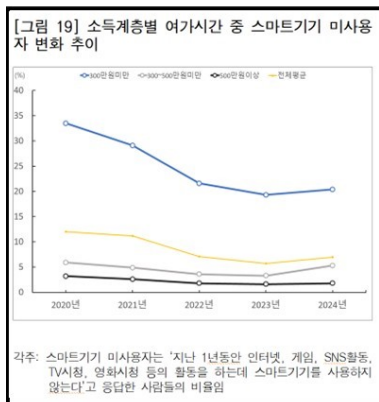


<표 7> 국내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이유(비경험자, 1순위 기준)

구분	전체	소득계층 (%)		
		300만 원미만	300~500만 원미만	500만 원이상
시간이 없어서	37.9	24.1	41.1	44.4
가족, 친구와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	18.0	16.7	18.6	18.3
최근에 여행을 다녀와서	9.7	6.2	9.6	11.9
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8.1	10.9	7.6	6.8
건강상의 문제로	7.4	17.6	4.7	2.9
여행 경비가 부족해서	5.0	7.5	4.4	4.0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어서	4.6	6.6	4.3	3.5
여행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2.7	3.1	2.8	2.4
여행 정보가 부족해서	2.5	2.7	2.3	2.4
집안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2.3	3.2	2.6	1.5
관광시설이 불편해서	1.2	1.1	1.3	1.1
기타	0.6	0.4	0.7	0.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2024.

5. 온라인 여가활동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연도.

- 소득계층에 따라 여가활동을 다르게 경험하고 여가시간과 비용을 다르게 지출하는 것을 알게 됨
- 소득이 연령적 분포에 따라 매우 상이함을 알게 되면서 소득계층과 연령범위가 여가활동의 주요한 배경 변인임
 [2024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가구소득과 연령집단 교차분석 결과]
 -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의 66.1%가 60대 이상 연령집단에 분포되어 있으며,
 500만원 이상 집단의 60대 연령집단 분포는 15% 수준임
 - 500만원 이상 집단의 경우 연령대가 50대인 경우가 가장 많고(23.7%), 그 다음이 40대(21.2%) 순임
 - 300~5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어린자녀가 있는 기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음
- 그 외, 여가경력(leisure career), 여가 동반자, 여가에 대한 인식 등의 다양한 변인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